

대한민국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개편을 위한 연속 토론회

5차 토론회

미래 유아학교 10대 교육 의제



2021년 12월 30일 (목), 오후 3시~ 6시
국회 제1세미나실

주최/주관

육아정책연구소, 교사노동조합연맹, 국회의원 강득구, 강민정, 김종민, 윤영덕(가나다순)

미래 유아학교 10대 교육 의제

- 주제 : 미래 유아학교 10대 교육 의제
- 일시 : 2021.12.30.(목), 15:00~18:00
- 장소 : 국회 제1세미나실

시간	세 부 내 용
15:00~15:20	<p>개 회</p> <p>사 회 : 김근진 (육아정책연구소 부모교육연구팀장)</p> <p>인사말 박상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p> <p>격려사 김부겸 (국무총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축 사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전병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p>
15:20~17:50	<p>사 회 : 김근진 (육아정책연구소 부모교육연구팀장) 좌장 및 facilitator :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p> <p>의제 발표</p> <p>문미옥 (유아교육대표자연대 의장) 우영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박영란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회장) 이중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 박다솜 (서울교사노조 유아부위원장(제2대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 김현숙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회장) [종합]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p> <p>토 론</p> <p>토론 1: 성기선 (더불어민주당 교육대전환위원회 부위원장) 토론 2: 장명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교육정책분과 자문위원) 토론 3: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회 위원) 토론 4: 고효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p>
17:50~18:00	<p>자유토론, 질의응답, 추가토론 마무리 및 폐회</p>

미래 유아학교 10대 교육 의제

2021년 12월 30일 (목) 오후 15:00~18:00, 국회 제1세미나실

▶ 유튜브 생중계 ▶ 유아정책연구소_KICCE, 교사노조연맹 TV



주최/주관 유아정책연구소, 교사노동조합연맹, 국회의원 강득구, 강민정, 김종민, 윤영덕 (가나다순)

후원/연대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육의 봄,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사)경기도유치원연합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를 위한 추진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사)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사)행복한 미래교육포럼 등(가나다순)

진행순서

구분	시간	세부내용
개회	15:00~15:20	사 회 : 김근진(유아정책연구소 부모교육연구팀장) 인사말 : 박상희(유아정책연구소 소장) 격려사 : 김부겸(국무총리),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축 사 : 김민석(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강득구(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 강민정(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 조희연(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전병주(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토론회	15:20~17:50	사회 : 김근진(유아정책연구소 부모교육연구팀장) 좌장 및 facilitator : 박창현(유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 의제 발표 문미옥(유아교육대표자연대 의장), 우영혜(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박영란(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회장), 이종규(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 박다솜(서울교사노조 유아부위원장 (제2대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 김현숙(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회장) [종합] 박창현(유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 토론 1: 성기선(더불어민주당 교육대전환위원회 부위원장) 토론 2: 장명림(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교육정책분과 자문위원) 토론 3: 송경원(정의당 정책위원회 위원) 토론 4: 고효선(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마무리	17:50~18:00	자유토론, 질의응답, 추가토론 마무리 및 폐회

연속 토론회 순서

- 1차: 대한민국의 미래 유아교육보육체제 이대로 괜찮은가?(2021. 9. 30.)
- 2차: 미래교육을 위한 학급당 유아수(2021. 10. 22.)
- 3차: 미래 유아학교 교육과정의 방향은?(2021. 11. 18.)
- 4차: 미래 유아특수교육의 방향과 과제(2021. 12. 10.)
- ▶ 5차: 미래 유아학교 10대 교육 의제(2021. 12. 30.) ◀

※ 사전등록 후 자료집 다운 가능, 사전등록 링크 추후 배포

CONTENTS

인사말

박상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격려사

김부겸 (국무총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축사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전병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의제 발표

문미옥 (유아교육대표자연대 의장)	15
우영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21
박영란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회장)	29
이중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	37
박다솜 (서울교사노조 유아부위원장(제2대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	49
김현숙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회장)	61
[종합]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	71

토론

1. 성기선 (더불어민주당 교육대전환위원회 부위원장)	97
2. 장명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교육정책분과 자문위원)	100
3.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회 위원)	107
4. 고효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111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박상희입니다.

대한민국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개편을 위한 연속 토론회 중, 마지막 토론회인 〈미래 유아학교 10대 교육의제〉를 육아정책연구소와 교사노조연맹,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 연구소는 유아교육과 보육계의 여러 단체들과 9월부터 5차 간의 토론회를 통해 미래 유아교육 체제개편을 위한 중요한 의제들을 도출해왔고,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에서 중요한 정책 현안들을 이슈화하고, 이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왔습니다. 이에 유보통합, 유아학교, 무상, 의무교육 및 제반의 여러 정책들이 관심을 받게 되었고, 캠프의 공약들로 반영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연속 토론회의 의미가 매우 컸다고 봅니다.



그동안 함께 노력해주신 유아교육과 보육계의 선생님들과 여러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를 잘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고, 제안해주신 여러 의제들을 정책화할 수 있도록 육아정책연구소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토론회를 이끌어주시는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님, 김근진 육아정책연구소 부모교육연구팀장님, 교사노조연맹의 여러 선생님들을 비롯하여 의제발표, 토론을 위해 모여주신 문미옥 유아교육대표자연대 의장님, 우영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님, 박영란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회장님, 이중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님, 박다솜 서울교사노조 유아부위원장님(제2대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 김현숙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회장님, 성기선 더불어민주당 교육대전환위원회 부위원장님, 장명립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교육정책분과 자문위원님,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회 위원님, 고효선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미래 유아학교를 중심으로 한 유아교육과 보육 체제개편과 교육 대전환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앞으로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미래 대응 신체제를 구축하고, 코로나 19 팬데믹과 미래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유아교육 체제가 필요합니다. 유아교육의 국가책임과 공공성 강화를 통해 교육의 질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아이의 출발선 평등을 보장하는 질 높은 공교육을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질 높은 유아학교로의 체제 전환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가 미래교육의 중심이 될 유아학교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를 논의하고, 미래 유아학교에 꼭 필요한 교육 의제들을 발굴해 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늘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격려사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부겸입니다.

‘미래 유아학교 10대 교육 의제’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정책토론회를 주최해주신, 육아정책연구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그리고 주관을 맡아주신 강득구, 강민정, 김종민, 윤영덕 국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이 0.84명일 정도로 심각한 저출생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추계에 따르면 2070년의 인구는 현재 보다 1,400만 명이 줄어든 3,700만 명이 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단연 교육과 보육입니다. 취학 전 영유아 교육과 보육 분야에서의 체제 개편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육아보육 환경 확립과 미래세대 교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학부모님들과 종사자들이 말씀하시듯이 이미 기존의 체제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환경의 변화로 더욱 많은 제도개선과 혁신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육아정책연구소가 기획한 <대한민국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 개편을 위한 연속 토론회>는 우리에게 매우 절실한 토론의 장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벌써 다섯 번째로, 그동안 개최된 네 번의 토론회는 유아교육과 보육계가 당면한 정책 현안들인 유아 학교, 유보통합, 학급당 유아 수 문제, 교육과정 및 유아 특수교육의 미래 방향성에 대해 논의를 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마지막 토론회를 통해서, 이번 <미래 유아학교 10대 교육 의제>에서는 그간 이루어진 토론들을 바탕으로 유아교육과 보육계의 현안과 과제들이 ‘10대 의제’로 구체화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러 전문가와 유아교육보육 종사자들께서 주신 의견을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비단 이번의 토론회 뿐 아니라, 항상 현장의 목소리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토론회까지 많은 애를 써주신, 박상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님과 박창현 미래교육연구팀장님, 그리고 교사노동조합연맹 관계자분들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오늘 토론회가 코로나19 방역 상황으로 인해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는데, 어려운 시기에도 미래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열정을 갖고, 논의에 참여해주시는 전문가와 관계자, 그리고 유튜브로 참여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임인년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대한민국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개편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정책토론회를 마련해주신 육아정책연구소 박상희 소장님과 박창현 미래교육연구팀장님, 교사노동조합 연맹과 여러 국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연속토론회는 유보통합과 미래 유아학교, 유아무상교육과 의무교육 등 중요한 대선 핵심 의제를 발굴해왔습니다. 그 대미를 장식하는 오늘 토론회가 미래 유아학교 10대 의제 제안을 통해 유아교육과 보육 발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로서, 저는 여러분께서 논의하신 여러 가지 사안을 깊이 경청하고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아이들이 어느 기관에 다니든 교육과 보육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유보통합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를 시작하고 단계적 실행 방안을 만들어 속도감 있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동안 해결되지 못해왔던 교육과 보육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말이 아닌 실천으로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화답하겠습니다. 부모와 아이, 교사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격려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입니다.

‘대한민국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 개편을 위한 연속 토론회’의 마지막 순서인 ‘미래 유아학교 10대 교육 의제’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상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님,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님, 공동 주최에 나서시는 여러 국회의원들과 토론회 관계자 여러분, 함께해 주시는 발제자분들과 내외 귀빈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이 시대 어른들의 책무입니다. 여성의 경제·사회적 참여가 확대되고,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며 교육·보육 시설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흡한 정책으로 많은 부모님들이 육아의 어려움과 일자리 단절의 고통을 호소하고 계시고, 반복되는 아동학대로 아이를 낳아도 마음 편히 맡기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부족한 교육·보육 환경이 저출생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교육·보육 환경을 저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출산부터 초등학교 입학까지, 육아 사각지대가 없는 촘촘한 정부 지원과 함께, AI를 기반으로 한 돌봄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교육·보육 정책이 절실합니다. 디지털 미래 사회에 대비해 획일화된 교육현장을 개선하고,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유아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수준 높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치권과 교육계가 모두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가 현행 교육·보육 제도의 문제점을 명확히 짚고, 제도 개선과 구체적 대안 마련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국민의힘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자라나는 아이들 개개인이 갖고 있는 재능의 씨앗을 마음껏 꽃피울 수 있는 올바른 교육·보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일 ‘대한민국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 개편을 위한 연속 토론회’ 개최를 거듭 축하드리며,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민석입니다.

대한민국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개편을 위한 연속 토론회가 벌써 마지막 회차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연속토론회의 마지막 주제 <미래 유아학교 10대 교육 의제>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까지 토론회를 이끌어주신 육아정책연구소 박상희 소장님을 비롯한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님, 교사노동조합연맹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님, 윤영덕 의원님,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앞선 연속토론회를 통해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개편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유아교육·보육체제와 관련한 어려움에 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으며, 학급당 유아 수나 유아학교 교육과정의 방향, 유아 특수교육의 방향과 앞으로의 과제 등 다양한 각도에서 유아 교육·보육체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귀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각 토론회에서 유아교육과 보육 관련 각계각층의 신중한 의견을 나누며 자라나는 미래의 보물인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미래 유아교육·보육체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귀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유아교육과 보육체제의 개편은 심각한 저출산의 현실을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갖추는 데 필요합니다. 현실적인 체제개편을 위해서는 여러 전문가와 유아교육·보육 관련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앞서 이어진 토론회를 거치며 논의한 의견들이 모여, 미래 유아학교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이루어진 귀중한 논의들이 오늘 토론회를 통하여 더욱 실효성 있는 미래 유아학교 10대 의제로 구체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개편을 위한 연속 토론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좋은 의견을 통해 올 한해 의미 있는 마무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양 만안구 출신 국회의원 강득구입니다.

‘미래 유아학교 10대 교육 의제’를 논의하는 5회차 연속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사노조연맹,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육아정책연구소,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등 15개 단체가 힘을 모아 총 5회에 걸쳐 미래 유아교육의 방향에 대해 공론의 장을 마련 해주셨습니다. 그동안의 준비와 노력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교육의 출발점인 영유아시기부터 국가책임이 크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저출생과 지방소멸의 어려운 시기에 이 땅의 우리 아이들이 안정적인 교육체제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의 뜻깊은 논의 자리는 우리 사회에 중요한 기억과 기록이 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중심 의제인 ‘유아학교’라는 단어를 낯설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유치원(幼稚園)’이라는 명칭은 일본의 유아교육기관 명칭인 ‘幼稚園(요치엔)’을 한국식 발음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일제 잔재였던 ‘국민학교’를 1996년 ‘초등학교’로 개칭한 것처럼, 이제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바꿀 때입니다. 이미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에는 유치원이 유아교육을 하는 ‘학교’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 작년 10월에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은 유보통합이라는 국가책임으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유아학교로 전환하면서 영유아의 무상교육과 의무교육, 학제 개편 논의에 물꼬를 틀 수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는 이원화된 정부 부처는 물론 교육청과 지자체의 혼선도 징검다리를 하나씩 넘듯이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의 어려움, 그리고 사회적·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좁히는 데도 이 흐름에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특히, 오늘 토론회에서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쟁점들을 학부모와 시민단체로부터 제안 받아 공통 점을 분석해 ‘10대 유아학교 교육 의제’를 발표하고 토론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함께 합니다.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은 더 겸손하고 더 진정성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국민과 학부모와 교직원과 함께 가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를 기울이고 우리 아이들의 현재와 미래의 삶에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회의 사회를 맡아주신 김근진 육아정책연구소 부모교육연구팀장님과 종합 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신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님, 그리고 의제발표와 종합토론을 맡아주신 각계각층의 여러 교육전문가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회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의 다양한 의견개진을 통해 미래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양질의 유아교육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제언을 토대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입니다.

올 한해 ‘대한민국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개편을 위한 연속토론회’가 많은 분들 덕분에 어느덧 5차 토론회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토론회 과정에서 모아졌던 의제들을 중심으로 마지막 토론회 “미래 유아학교 10대 교육 의제”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유아정책연구소, 교사노동조합연맹 및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어 토론회 사회, 발제, 토론을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랫동안 유아교육·보육 체제개편의 필요성을 논의해왔습니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여 실태조사, 교원양성, 재정 지원 등이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치원인지 어린이집인지, 국공립인지 사립인지에 따라서 아이들이 받는 프로그램, 급식의 질이 현저히 달라집니다.

현행 유아교육법 제24조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유아교육과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학부모 부담 비용이 존재합니다. 2018년 전국보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경우 월평균 61,000원을 총 보육비용으로 지불합니다. 유치원알리미 정보공시지표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 교육비는 월평균 17만원에 달합니다. 이렇듯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교육 현실을 통합된 구조 속에서 무상교육과 무상보육을 실시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평등교육을 실현해야 합니다.

2019년에는 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행복 추구를 위해 교육과정을 개정하였습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실시하여 유아의 흥미와 놀이가 중심이 되는 교육·보육을 실현하였으나 초등교육과정과의 연계성 강화,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교사 의견 반영, ‘놀이’ 중심 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의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미래 유아학교로의 체제개편을 위하여 유아교육·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학부모, 교육부·보건복지부 관계자, 여러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받아 유아학교 교육과정 방향, 학급당 유아 수 기준 설정, 표준유아교육비 재산정을 통한 단계적인 무상교육 실현, 보편설계기반 유아특수교육 환경 마련, 유아학교 설립기준 체계 정비, 교원양성체제 개편 등을 논의해왔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토대로 ‘미래 유아학교 10대 교육 의제’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이제껏 나눈 여러 제안들을 통해서 보다 발전적인 유아교육·보육 체계를 구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은 평등하고 차별 없는 교육·보육 체계 속에서 성장하고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유아교육·보육 체제개편의 목적이 아이들이 행복하게 배우고 놀고 쉬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교사분들이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보육현장을 위해 애쓰시는 걸 알고 있으며,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저 역시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고 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보여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교육감 조희연입니다.

2021년 한해를 갈무리하고 다가오는 임인년을 희망으로 준비하는 시기에 대한민국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개편을 위한 연속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간 진행된 4차 간의 토론회를 통해서 미래 유아교육 체제개편을 위한 중요한 의제들이 도출되었고 오늘 토론회에서는 미래 유아학교 10대 교육 의제들이 제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번 연속 토론회는 유아교육의 중요한 이슈들을 유아정책연구소, 교사노조연맹,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하는 장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미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상희 유아정책연구소장님, 박창현 유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님과 교사노조연맹 그리고 함께 노력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미래 교육의 대전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지속가능한 유아교육 체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국가교육의제로서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유아 의무교육 시행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어렵다고 더 이상 미루기에는 교육 불평등과 저출생으로 대표되는 우리 사회의 위기가 아이들의 미래까지 너무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보육과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이 더욱 강화돼야 될 절박한 과제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미래교육을 위한 유아교육 체제를 전환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라면서 미래 유아학교에 꼭 필요한 교육의제들을 발굴해 내는 자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서울시교육청도 미래교육을 위한 유아 학교로의 전환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그 실현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다가오는 2022년 임인년에 뜻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전병주입니다.

대한민국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개편을 위한 연속 토론회 중, 마지막 토론회인 <미래 유아학교 10대 교육의제>에 축사를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간 육아정책연구소와 교사노조연맹,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다양한 단체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5차까지의 정책 토론회를 기획하고, 개최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의 중요한 의제들을 도출되었고, 현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논의의 장을 마련해주신 박상희 육아정책연구소장님,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님과 교사노조연맹, 그리고 함께 노력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연대해주신 많은 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으로 유아학교로의 명칭변경을 통한 유아학교 체제로의 전환에 적극 찬성합니다. 그간 저도 서울시의회 교육위 의원으로서 유아학교의 중요성을 강조해왔고, 유아학교의 명칭 변경을 강력하게 제안해왔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미래교육의 중심이 될 유아학교를 어떻게 맞이해야할지를 논의하고, 미래 유아학교에 꼭 필요한 좋은 교육 의제를 발굴해 내어 더 나은 유아교육 현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저도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제 발표

의제발표 1: 문미옥 | 유아교육대표자연대 의장

의제발표 2: 우영혜 |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의제발표 3: 박영란 |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회장

의제발표 4: 이중규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

의제발표 5: 박다솜 | 서울교사노조 유아부위원장

(제2대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

의제발표 6: 김현숙 |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회장

종합의제발표: 박창현 |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

의제발표 1

**유아교육발전을 위한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문미옥 | 유아교육대표자연대 의장



1

- 단체명: 유아교육발전을 위한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 담당자: 문미옥 / 유아교육대표자연대 의장

〈의제 요약〉

- 영유아
 - 영유아가 있는 곳 불문한 완전 무상교육
 - 영유아교육 질 관리 선진화
- 학부모
 - 가족의 부모됨 역량지원 정책
 - 강력한 영유아기 부모 지원 정책
- 학교&교사(영유아 교육기관)
 - 영유아 교육기관 스마트 안전 시스템 구축
 - 영유아 교사 교권 보장
- 영유아 교육제도
 - 교육부로 유보통합
 - 교사 양성제도 일원화과제 제안 배경

제20대 대통령선거 유아교육 정책과제

차기 정부 영유아 교육 비전

- 교육 비전
 - 영유아와 가정을 살리는 0-5세 완전무상교육

영유아 정책과제

- 영유아
 - 영유아가 있는 곳 불문한 완전 무상교육
 - 영유아교육 질 관리 선진화

□ 학부모

- 가족의 부모됨 역량지원 정책
- 강력한 영유아기 부모 지원 정책

□ 학교&교사(영유아 교육기관)

- 영유아 교육기관 스마트 안전 시스템 구축
- 영유아 교사 교권 보장

□ 영유아 교육제도

- 교육부로 유보통합
- 교사 양성제도 일원화

정책과제 제안 배경

-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영유아들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임에도 온전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며, 환경에 따라 천차만별의 영유아기를 보내고 있다.
- 더욱이 교육기본법 제9조 제1항에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여전히 영유아를 위한 교육기관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 명칭에서부터 교육적 가치가 훼손되어 있다.
- 또한, 영유아가 있는 장소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가정이나에 따라 차별되고 있는 정책으로 영유아와 가정 모두를 살리는 정책이 되지 못하고 있
- 미흡한 현재의 영유아기 교육과 관련하여 영유아, 학부모, 교육기관, 교육제도의 관점에서 차기 정부는 '가족(국민)이 행복한 영유아 출발선 교육'을 이뤄나가야만 한다.
- 이에, '영유아와 가정을 살리는 0-5세 완전무상교육'을 목표로 유보통합, 유치원어린이집 부처 통합, 일제 잔재인 유치원의 유아학교로의 명칭변경과 영아학교 등의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정책과제 설명

□ 영유아

■ 영유아 완전 무상교육

- 국가가 책임지는 0~5세 영유아교육 시스템 확립
- 영아학교, 유아학교 확립 및 영유아가 가정에 있건 기관에 있건 모두 동일한 교육적 지원 보장

■ 영유아교육 질 관리 선진화

- 다양한 영유아 교육과정 수용 통한 교육 다양성 확보
- 공·사립 영유아 교육·보육기관 균형 발전 지원

□ 학부모

■ 가족의 부모됨 역량지원 정책

- 청소년기부터 예비부모 교육 확대
- 가족 구성 다양화에 맞춘 영유아기 부모 지원 정책 강화

■ 강력한 영유아기 부모 지원 정책

- 출산 및 육아휴직 기간 확대, 육아휴직 급여지급 최대
- 영유아기 돌봄서비스 개선 및 수요자 영유아 교육기관과 가정육아를 포함한 선택권 보장

□ 학교&교사(영유아 교육기관)

■ 영유아 교육기관 스마트 안전 시스템 구축

- 질병, 영양, 교통안전 대책 강화 통한 안전한 영유아 교육기관 구축
- 유형 및 경중 불문 성범죄자·아동학대 전력자 영유아 교육기관 취업 영구 제한

■ 영유아 교사 교권 보장

- 영유아 교육 책임자인 교사의 권익 보장
- 교사 사기진작 자존감 회복 정책 추진

□ 영유아 교육제도

■ 교육부로 유보통합

- 교육과 보육을 교육부로 통합 및 교육·보육기관 영아학교와 유아학교 변경
- 교육1부, 교육2부 구성하여 교육1부 0~5세 교육·보육 총체적 관장

■ 교사 양성제도 일원화

- 교육부 0~5세 담당 교사 자격 관리 체제 일원화
- 교사 양성 교육과정 개선

2-1.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2-2.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우영혜 |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명: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 담당자: 우영혜 /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	---

□ 5대 정책 의제 (정책우선순)

- 유아학교 명칭 변경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
- 국공립단설유치원 확대
- 유아교육 보육을 교육부로 통합
- 미래 교육을 위한 학급당 유아 수 감축
- 질 높은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한 여건 조성

1대 의제명	유아학교 명칭 변경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
의제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제에 대한 개요 및 선정 이유 -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하여 1995년 국민학교는 초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나 유치원은 일 본식 이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개명이 필요함 - 유치원을 유·초·중·고·대학교와 같이 학교 체제를 갖추기 위해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학교로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교육기본법 제9조와 유아교육법 제2조는 유치원을 '학교'로 명시하고 있음 - 유아교육법 내부 법 조항에는 유치원으로 되어 있어서 법체계의 일관성 결여
정책 제언 또는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학교 명칭 변경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 - 학교 체제에 맞는 유아교육 정책 수립 - 유아교육 관련 모든 법령 재 정비

2대 의제명	국공립단설유치원 확대
의제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제에 대한 개요 및 선정 이유 - 학부모들이 국공립 단설유치원을 선호하지만 국공립단설유치원이 부족한 실정으므로 원하는 부모는 모두 보낼 수 있도록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여야 함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가 선호하는 국공립단설유치원 부족 -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의 학비 부담 가중
정책 제언 또는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단설유치원 80% 확대 - 초·중·고등학교 유휴 교실 또는 유휴부지 이용하여 단설유치원 설립 - 초등학교병설유치원 3~4개원을 통폐합하여 단설유치원 설립 - 사립유치원 법인화 및 신설 사립유치원은 법인만 인가

3대 의제명	유아교육 보육을 교육부로 통합
의제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제에 대한 개요 및 선정 이유 - 영유아들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 - 동일 연령의 유아를 유치원과 어린이집, 성격이 서로 다른 기관에서 교육과 보육을 하고 있음 - 미래 인적자원의 첫 출발 교육을 차별 없이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연령의 유아들이 각기 다른 기관에서 교육과 보육으로 차별화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부처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이원화 체제로 되어 있음 - 이원화로 예산의 중복 지원 가능성 및 기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예: 어린이집 장학 등)
정책 제언 또는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교육부로 통합하여 유아학교로 함 - 초등학교병설유치원 3학급 이하는 유아학급으로 하고, 4학급 이상은 유아학교로 함(예: 초등학교 특수학급) - 유아학교에서 0~2세 영아학급, 3~5세 유아학급으로 함

4대 의제명	미래 교육을 위한 학급당 유아 수 감축
의제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제에 대한 개요 및 선정 이유 - 유치원의 학급당 유아 수는 유아교육법시행령 제16조에 의거 관할청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도 교육청별 학급 당 유아 수 기준이 다름 - 연령별 한 학급당 유아 수는 3세 최소 14명에서 5세 28명까지 17개 시도 교육청별 차이가 있음 - 유아 발달을 고려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학급당 유아 수를 감축해야 함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 발달과 안전성을 고려했을 때 현재 유치원의 학급당 유아 수가 많음 - 학급당 유아 수가 시·도 교육청별 차이가 너무 큼 - 어린이집 학급당 유아 수보다 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가 훨씬 많음 (어린이집: 3세 15, 4세 이상 20명) (유치원: 3세 14~24, 4세 19~26, 5세 22~28명)
정책 제언 또는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급당 유아 수 감축 -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동일하게 조정 - 교육부에서 학급당 유아 수 상·하한 인원을 정해줌 (교육감 협의회에서 협의 가능)

5대 의제명	질 높은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한 여건 조성
의제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제에 대한 개요 및 선정 이유 - 맞벌이 부모가 늘어남에 따라 방과후 과정 운영에 대한 학부모 요구사항이 다양해지고 있으나 유치원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실정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지역 방과후 과정 희망 유아 전체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음 - 1일 8시간 이상 운영이 유아들을 힘들게 함 - 통학버스 미 운영으로 학부모가 선호하지 않음 - 전담사가 배치되어 책임감 및 교육의 질 저하
정책 제언 또는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 과정 운영 시간 탄력적으로 조정 - 통학버스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 방과후 과정 정교사 배치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명: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 담당자: 곽효경 /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정책국장
-----	---

□ 5대 정책 의제 (정책우선순)

- 유아학교 명칭 변경
- 국공립단설유치원 확대
- 학교급식법 개정(유치원 예외 규정)
- 시도교육청에 유아교육 전담부서 설치
- 방과후 과정 전담 기관 설립·운영

1대 의제명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의제 설명	<p>* 의제에 대한 개요 및 선정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제 잔재 청산의 일환으로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명칭이 바뀌지도 26년이 지났지만 유치원은 아직도 '유치원'이란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 -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49번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하고 교육기관으로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법 제2조에 유치원을 학교로 명시하고 있으나, 그 외의 법조항에서는 유치원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 - 유치원의 명칭은 1897년에 일본인 자녀들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설립된 부산유치원에서 사용했던 명칭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음. 초등학교의 경우 기존의 명칭(초등학교)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초등학교의 의미가 일제 강점기 교육관인 황국시민교육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 이를 개정하였으나 유치원은 아직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 교육체계 및 초-중-고-대의 '학교' 체제와 명칭의 통일성, 연계성을 위해 2002년부터 유아교육계의 요구가 지속되고 있음 - 단설유치원 설립이 확대되면서 형식적으로는 학교와 유사한 형태를 갖추었지만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유치원이 학교급으로서의 위상 정립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즉 초중등학교에는 당연히 있는 교사들의 주당 수업시간 배정, 보건교사 및 전담교사 배치, 원로교사 수업시수, 행정실무사나 교육복지사 배치, 운동장 및 각종 시설 기준 등, 학교라면 당연히 있어야 하는 기준들이 없어 교사들의 업무가 과중되고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정책 제언 또는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기 위한 유아교육법 등 관계 법령 개정 - 현행 유아교육법 제2조는 유치원을 "학교"로 명시하지만 나머지 조항들은 유치원으로 표기하고 있기에 통일성 있게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이 필요함

2대 의제명	국공립단설유치원 확대
의제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제에 대한 개요 및 선정 이유 - 현재 심각한 인구절벽 시대를 맞이하여 첫 번째 과제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인프라 구축이라고 봄 - 국공립단설유치원은 유아교육 전공자의 관리자 배치와 유아들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시설 설비로 올바른 유아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최적의 유아교육기관이라고 봄.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취원률이 급격히 떨어지는데 비해 국공립단설유치원의 취원률은 높은 상황임 - 병설유치원의 경우 기존 시설이 초등학교의 유휴교실을 사용하고 있어 유아 발달수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유아들의 활동과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유아교육 전공자가 아닌 초등교장, 교감이 유치원 관리자를 겸임하므로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과 관심이 부족한 상황임 - 그 결과 1~2명의 교사가 교육과정 운영과 행정업무, 인사관리까지 처리 해야 하므로 반복되는 업무과중의 문제와 함께 교육과정 운영에도 지장을 초래함. - 소규모 병설유치원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비해 취원율이 저조하므로 1~3학급의 병설유치원을 통폐합하여 소규모단설유치원 설립이 필요
정책 제언 또는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단설유치원 확대

3대 의제명	학교급식법 개정(유치원 예외 규정)
의제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제에 대한 개요 및 선정 이유 - 유치원 3법 통과 후 유치원에서도 학교급식법에 의해 급식이 실시됨.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초·중·고 중심의 학교급식법에는 학기 중에만 급식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유치원에서의 간식과 방학 중 돌봄운영 시 급식은 영양사의 업무가 아니라는 주장으로 방학 중 돌봄 급식 실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의 돌봄 요구 증가에 따른 방학 중 돌봄을 실시 시 급식은 반드시 필요하며, 유아의 발달 특성상 유치원에서의 간식 제공은 불가피 함. 방학 중 돌봄 참여 유아가 80% 이상인 것으로 볼 때, 영양사 관리 감독 하에 양질의 급·간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함
정책 제언 또는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식법 개정(유치원은 방학 중에도 급식을 실시할 수 있음을 명시)

4대 의제명	시도교육청에 유아교육 전담부서 설치
의제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제에 대한 개요 및 선정 이유 - 17개 시도교육청 중 유아교육과가 설치되어 있는 교육청은 단 3곳 뿐! -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과 설치는 교육감의 권한이지만 시도교육청의 상이한 여건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정부차원에서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전담부서 설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과 함께 유아교육 전담부서를 설치함으로써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유아교육이 학교급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
정책 제언 또는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개 시도교육청에 유아교육 전담 부서 설치 및 확대

5대 의제명	방과후 과정 전담 기관 설립·운영
의제 설명	<p>* 의제에 대한 개요 및 선정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은 2019 개정 누리과정 시행과 함께 유아중심·놀이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강조하고 있지만, 교육현장은 방과후과정 및 돌봄으로 교사는 교육에 몰입하기 어려운 상황임, - 방과후 과정 관련 행정업무의 지속적 증가 및 과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방과후과정과 돌봄을 전담하는 기관의 설립·운영을 정책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은 유아중심·놀이중심의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며, 연구와 전문성을 강화하는 교육 공간 이어야 함 - 교육과 보육의 특성에 적합하게 인적, 물적 환경이 구성되어 운영되어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음.
정책 제언 또는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 과정 전담 기관 설립·운영 필요

3-1.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3-2. 경기도유치원연합회

박영란 |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회장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명: (사)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 담당자: 최성균 /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사무총장
-----	--

□ 5대 정책 의제 (정책우선순)

- 유아무상교육 실현
- 사립유치원 퇴로 마련 - 용도변경 등
- 공·사립유치원 균형 발전
- 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자율성 보장
- 0~2세 보육, 3~5세 교육 이원화 체계 확립

1대 의제명	유아무상교육 실현
의제 설명	* 의제에 대한 개요 및 선정 이유 - 저출산 시대에 모든 정책의 기본은 유아의 복지 - 유치원 학령기 모든 유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공립유치원과 같이 무상교육 실현
현황 및 문제점	- 유아교육법에 무상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공립유치원만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정책 제언 또는 과제	- 유치원 학령기의 모든 유아들이 합당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완전한 유아무상교육을 실현하여야 함.

2대 의제명	사립유치원 퇴로 마련 - 용도변경 등
의제 설명	* 의제에 대한 개요 및 선정 이유 - 운영이 어려운 사립유치원의 퇴로(용도변경)이 절실함
현황 및 문제점	- 저출산에 따른 유아 수 감소로 운영이 어려운 사립유치원들의 퇴로가 마련되어야 함 - 폐원을 해도 유치원용지에 대한 용도변경이 안되어 유치원이 지역의 흉물로 전락함 (대부분의 유치원이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민들에게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음)
정책 제언 또는 과제	- 사립유치원이 폐원할 경우 유치원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이 함께 되도록 하여 지역에 효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3대 의제명	공·사립유치원 균형 발전
의제 설명	* 의제에 대한 개요 및 선정 이유 - 공립과 사립의 지원 차별을 해소하여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현황 및 문제점	- 공립은 국가의 예산을 통해 지원되므로 유치원 운영이 어렵지 않으나 사립은 저출산, 코로나19 등으로 유아 수가 급속히 감소하여 운영이 어려워지는 등 공·사립의 지원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음 - 공립확대 정책 등으로 인해 사립의 폐원이 증가하고 사립교직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음
정책 제언 또는 과제	- 공사립이 경쟁관계가 아닌 상생관계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 공립위주의 유아교육정책은 유치원 운영의 주체가 국가와 사인인 상황에서 사인에게 극도로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음 - 유아들을 위한 질 높은 교육을 하기 위한 공·사립유치원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함

4대 의제명	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자율성 보장
의제 설명	* 의제에 대한 개요 및 선정 이유 - 유아들을 위한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 교육을 하기 위해 유치원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
현황 및 문제점	- 사립유치원의 자율성을 보장하면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이 늘어난다는 논리는 유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유아교육에 대한 왜곡된 인식의 결과 - 초등학교는 방과후학교를 높이 평가하고 확대 정책을 펴고 있으며 학부모의 만족도도 높다고 하면서, 사립유치원의 다양한 방과후과정 교육을 외면하고 놀이와 보육을 우선으로 하고 있음
정책 제언 또는 과제	- 사립유치원의 특성화활동을 포함한 방과후과정은 학부모들의 요구와 수요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학원 등으로 유아들이 사교육을 받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크고 사교육비 경감 등의 효과가 있는 만큼 유치원의 자율성을 부여하여 유아들의 다양함과 창의력을 높이는 유아교육 정책을 추진해야 함

5대 의제명	0~2세 보육, 3~5세 교육 이원화 체계 확립
의제 설명	* 의제에 대한 개요 및 선정 이유 - 기관간의 처우개선을 위해 유보통합을 해서는 안됨 - 보육과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본질에 따라 연령 이원화 체계 필요
현황 및 문제점	- 어린이집의 처우가 사립유치원보다 열악하다하여 유보통합을 주장하는 것은 교육의 질, 교사의 질, 학교의 기준 등 다양한 조건이 부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으로 인한 혼란만 가중시킬 것임
정책 제언 또는 과제	- 유치원은 공·사립간 차별을 해소하고, 어린이집은 정부지원, 미지원차별 해소가 먼저 추진되어야 함

3-2

- 단체명: (사)경기도유치원연합회
- 담당자: 박형열 / 경기도유치원연합회 사무국장

□ 5대 정책 의제 (정책우선순)

- 출산율 저하에 따른 유아교육 재구조화
- 사립유치원 운영의 안정성을 위한 누리과정 기본교육비의 현실화
-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 사립유치원 자율성 확대
- 국가교육위원회에 사립유치원 대표 당연직 포함

1대 의제명	출산율 저하에 따른 유아교육 재구조화
<p>의제 설명</p>	<p>* 의제에 대한 개요 및 선정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율 저하에 따른 유아교육 대상자의 감소 추세에 따라 유아교육 전반의 재구조화가 필요함.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출구전략을 국가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유아 수 감소로 사립유치원이 폐원하는 상황에서 국·공립유치원을 신설하는 것은 국가적 인프라 낭비이며 국민 세금 낭비의 결과가 될 것임 - 사립유치원의 문제를 사립유치원만의 문제로 제한된 인식에서 벗어나, 국가 차원에서 공·사립 유아교육 환경 재구조화를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함
<p>현황 및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출산율 저하와 국공립유치원이 증설되고 있지만 입학유아 수 부족에 따른 충원을 부족이 동시에 증가 추세임 - 유아수의 감소에 따른 학급당 원아수를 낮추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적 손실을 고려하여 국가 지원 정책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함 - 사립유치원의 매입형, 공영형 등 기존 정책과 더불어 폐원의 필요성이 있는 사립유치원 경우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출구전략 마련이 시급함
<p>정책 제언 또는 과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장기적 전망으로 유아교육 재구조화를 추진하기 위한 협의 기구 및 정책개발 필요 2) 사립유치원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안정적인 유아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립유치원 출구 전략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매입 방안: 단설유치원, 병설유치원들의 통·폐합으로 질 좋은 교육환경 조성, 지역 공공시설(커뮤니티센터, 데이케어센터, 지역공부방 등)로 활용 - 폐원 : 폐원을 희망하는 유치원의 경우 현실적 용도변경 추진 허용 3) 사립유치원 매입 후 공공시설 활용 시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니어와 아동이 공유하는 돌봄센터, 방과 후 교육시설, 작은 도서관, 지역연계 유아체험 센터(인근 유치원이 활용하는 방식)

2대 의제명	사립유치원 운영 안정성을 위한 누리과정 기본교육비의 현실화
의제 설명	<p>* 의제에 대한 개요 및 선정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유아들도 국·공립유치원 유아들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납부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이므로 국가로부터 동등한 지원을 받을 당연한 권리가 있음 - 사립유치원의 기본교육비를 국·공립유치원 수준으로 높이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며 평등하게 교육받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의 기본적 의무임 - 국가는 물가상승분과 인건비 상승분에 미치지 못하도록 교육비 인상률을 제한하고 있어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교육여건 차이가 누적되고 이는 공·사립유치원 유아들의 유아교육 부실화로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사립유치원의 교육비는 기본교육비와 수익자 부담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익자 부담 경비는 원아들의 선택에 따라 달라짐에도 일률적으로 계상하여 전체 교육비 인상률을 1.0%(2022년도)로 제한하고 있음 - 이는 물가인상률은 물론 최저인건비 상승 등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근거도 없이 책정되어 사립유치원의 교육여건을 악화시키고 있음 - 실제로 수익자 부담경비를 제외한 기본 교육비를 비교하면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사립유치원 교육비는 70%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이는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은 학부모 부담금을 부담하면서 기본적으로 투입되는 교육비조차 적어 같은 납세자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유치원의 원아에 비해 이중의 차별을 받고 있음 이는 명백히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 -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를 국·공립유치원 수준으로 높여 양질의 교사가 유아 지도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 마련을 위한 처우개선 및 행정인력 지원을 위한 보강이 절실한 과제임 - 개정 누리과정 놀이중심 교육과정 실천에 있어 놀이의 내실화를 위해 다양한 자원 공급과 활동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비현실적이고 차별적인 교육비 제한으로 유아교육의 부실화 우려
정책 제언 또는 과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누리과정 지원비를 대폭 인상하여 기본교육비가 국·공립유치원 수준에 근접하도록 하고 이를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및 교육여건 향상을 위해 쓰여 질 수 있도록 해야 함 2) 물가 상승분과 인건비 상승분에 상응하는 교육비 인상과 이를 누리과정지원비 인상에 반영하여 사립유치원의 교육여건 안정화를 추진해야함 3) 국·공립수준의 기본교육비가 확보되면 다음 단계로 누리과정지원비를 추가로 늘려서 학부모 부담금을 국공립 수준으로 줄여 나가야함


3대 의제명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의제 설명	<p>* 의제에 대한 개요 및 선정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기관에 따른 구분 없이 모든 유아가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 취학 유아에 대해서 학부모 부담금을 국가가 부담 - 유아교육기관 간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유아교육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임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 후 과정비를 제외한 교육비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국·공립유치원과 달리 사립유치원에 취학하는 유아의 학부모는 매월 일정부분 부담을 하고 있음 - 충분하고 자유롭게 기관을 선택 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평등하게 교육 받을 헌법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구조임 - 비용이 교육기관을 선택하는 중요한 요소가 됨으로서 우수한 교육과정과 더 좋은 교육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선의의 경쟁을 무력화하여 유아교육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함
정책 제언 또는 과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기관에 따른 구분 없이 모든 유아가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 취학 유아에 대해서 학부모 부담금을 국가가 부담하기 위한 누리과정 지원비 인상이 필요함 2) 교육기관이 아닌 대상과 시간에 따른 교육비 지원 시스템으로 전환

4대 의제명	사립유치원의 자율성 확대
의제 설명	<p>* 의제에 대한 개요 및 선정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는 ‘놀이중심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다양하고 유아 주도적 교육이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과제임 - 유치원 마다 고유하고 특색 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모든 유치원에 적용하는 규정과 제도는 최소화되어야 함 - 따라서 교육과정운영과 관련된 제도는 모든 가능성을 지원 할 수 있는 열린 구조로 전환되어야 함 - 특성화 프로그램은 유아들의 다양한 경험과 재능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교육 절감에도 효과가 있음. 유치원의 특성과 현실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을 유치 할 수 있도록 함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유치원의 고유성과 특수성 유지 및 확대하는 것은 다양한 교육 실현이라는 점에서 필수적임 - 100년 전부터 시작한 우리나라 유아교육은 70년대 공립유치원이 생기기 전까지 오로지 사립유치원에서만 이루어져 왔음 - 우리나라 유아교육 발전을 선도하여 온 사립유치원은 ‘프뢰벨, 몬테소리, 발도르프 교육, 레지오 에밀리아 프로그램, 숲 유치원’을 도입하고 프로젝트 학습을 확산시킴 - 개정누리과정 놀이중심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자율적 창의적인 놀이는 놀이와 특성화 교육의 연계로 특성화 교육 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유연성을 요구하고 있음 - 질 높은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을 위해 규제와 통제 보다 기관의 특성에 맞는 교육활동 운영을 위한 시간 배치 및 통합운영의 자율성 필요 - 유치원의 방과후 특성화 활동은 초등 방과 후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사교육비 절감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효과가 입증됨 -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종류와 횟수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정책 제언 또는 과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운영 기준을 충족하되 사립유치원 설립이념의 교육철학과 방향에 맞는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자율성을 보장해야 함 2)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높여야 함.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은 교사의 경험과 능력에 크게 의존하므로 역량 있는 교사의 확보를 위한 국가의 지원 확대가 필요함 3) 유치원 교육과정과 특성화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을 추구하는 특성화 교육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5대 의제명	국가교육위원회에 사립유치원 대표 당연직 포함
의제 설명	<p>* 의제에 대한 개요 및 선정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구체적인 현실을 대변 할 수 있는 현장 전문가가 대표로 국가교육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유아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임 - 국가교육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사립유치원의 대표가 참여함으로써 사립유치원의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며 장기적이고 유기적인 유아교육 정책의 수립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함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계 중심의 의사결정 체제로 인하여 유아교육 현장의 전문가가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인해 구체적이고 현실감 있는 유아교육 정책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함 - 유아교육은 인간으로서 기본 소양을 갖추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충분한 투자와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 져야 함에도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음 - 국·공립유치원 중심의 유아교육 정책 추진은 다수를 차지하는 사립유치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발생 - 장기적인 과제로 유아교육 재구조화 및 사립유치원의 위상과 출구전략의 수립이 필요함 - 국가교육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사립유치원 현장의 대표가 포함되어야 함
정책 제언 또는 과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교육위원회에 사립유치원 추천 대표를 당연직으로 위촉 2)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유아교육 재구조화 및 유아교육 인프라 활용 방안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

- 4-1.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 4-2. 아이들이행복한세상
 - 4-3.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

이중규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



4-1

- 단체명: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 담당자: 장연화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책연구소 소장

□ 5대 정책 의제 (정책우선순)

- 누리과정 지원격차 해소
- 영아기 보육·교육의 중요성 확립 및 정책 마련
- 보육교직원 권익증진 방안 마련
- 어린이집 업무환경 개선
- 어린이집·유치원 통합 추진

1대 의제명	누리과정 지원격차 해소																			
의제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리과정은 '국가 수준의 공통 교육과정'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유아는 차별없이 양질의 교육과정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출발선 평등을 보장토록 한 '무상교육·보육' 정책임. - 누리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지원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격차 해소를 요청하는 바임.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리과정을 도입하면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던 어린이집 3~5세 예산을 2012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하였고, 2022년 12월까지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에 따른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에서 부담하고 있음. - 공통 교육과정을 추진하면서 3~5세 누리과정 보육료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동일하게 책정되었지만, 실제 어린이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원액은 큰 격차가 존재함(표 1 참조). <p style="text-align: center;">〈표 1〉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지원현황 (유아 1인 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사립유치원</th> <th>어린이집(인건비 지원 시설)</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누리과정 보육료</td> <td>월 260,000원</td> <td>월 260,000원 (1일 약 2,500원 보육료에 포함) 월 약 50,000원</td> </tr> <tr> <td>월 260,000원</td> <td>급간식비 제외 실제 보육료 월 210,000원</td> </tr> <tr> <td>운영시간</td> <td>4~5시간</td> <td>8~12시간</td> </tr> <tr> <td rowspan="2">방과후과정 / 누리과정 운영지원비</td> <td>평균 운영시간당 보육료 약 58,000원</td> <td>평균 운영시간당 보육료 약 21,000원</td> </tr> <tr> <td>70,000원</td> <td>평균 약 55,000원 [시도 전체 누리과정 유아수×7만원] - [시도전체 누리교사수 × 처우개선비 30만원]+ 운영지원비 8,410원</td> </tr> <tr> <td>학급 운영비</td> <td>학급당 450,000원 ※ 교육청 별 20~45만원 지원</td> <td>없음</td> </tr> </tbody> </table>	구분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인건비 지원 시설)	누리과정 보육료	월 260,000원	월 260,000원 (1일 약 2,500원 보육료에 포함) 월 약 50,000원	월 260,000원	급간식비 제외 실제 보육료 월 210,000원	운영시간	4~5시간	8~12시간	방과후과정 / 누리과정 운영지원비	평균 운영시간당 보육료 약 58,000원	평균 운영시간당 보육료 약 21,000원	70,000원	평균 약 55,000원 [시도 전체 누리과정 유아수×7만원] - [시도전체 누리교사수 × 처우개선비 30만원]+ 운영지원비 8,410원	학급 운영비	학급당 450,000원 ※ 교육청 별 20~45만원 지원	없음
구분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인건비 지원 시설)																		
누리과정 보육료	월 260,000원	월 260,000원 (1일 약 2,500원 보육료에 포함) 월 약 50,000원																		
	월 260,000원	급간식비 제외 실제 보육료 월 210,000원																		
운영시간	4~5시간	8~12시간																		
방과후과정 / 누리과정 운영지원비	평균 운영시간당 보육료 약 58,000원	평균 운영시간당 보육료 약 21,000원																		
	70,000원	평균 약 55,000원 [시도 전체 누리과정 유아수×7만원] - [시도전체 누리교사수 × 처우개선비 30만원]+ 운영지원비 8,410원																		
학급 운영비	학급당 450,000원 ※ 교육청 별 20~45만원 지원	없음																		

1대 의제명	누리과정 지원격차 해소																			
현황 및 문제점	구분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605 256 925 290">사립유치원</th> <th data-bbox="925 256 1242 290">어린이집(인건비 지원 시설)</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605 290 925 521"> 처우개선비 포함한 수당 총액 최대 710,000원 (기본급 보조-교직수당) 월 25만원 (인건비보조) 월 30만원 (담임수당) 월 13만원 (장기근속수당-5년이상) 월 3만원 </td> <td data-bbox="925 290 1242 521"> 처우개선비 360,000원 [운영지원비에서 30만원 (처우개선비 및 운영비 13,000원 포함) + 추가 지원 6만원] ※ 지자체별 추가 지원 수당 있음 </td> </tr> <tr> <td colspan="2" data-bbox="605 521 1242 554"> ※ 지자체 및 사설유형에 따라 처우개선 수당이 각각 다르게 지원되어 객관적인 비교에 어려움이 있음 </td> </tr> <tr> <td colspan="2" data-bbox="398 554 605 609" rowspan="2">실제 격차</td> <td colspan="2" data-bbox="605 554 1242 609">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비슷한 조건을 위한 설정 누리과정반 1반 / 현원 20인 * 급간식비는 유치원 별도편성에 따라 어린이집도 제외 </td> </tr> <tr> <td data-bbox="605 609 925 727"> ·보육료 5,200,000원 ·방과후과정 1,400,000원 ·학급운영비 450,000원 = 총 7,050,000원 </td> <td data-bbox="925 609 1242 727"> ·보육료 4,200,000원 ·운영지원비 1,100,000원 ·학급운영비 0원 = 총 5,300,000원 </td> </tr> <tr> <td colspan="4" data-bbox="605 727 1242 780" style="text-align: center;">-1,750,000원</td> </tr> </tbody> </table>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인건비 지원 시설)	처우개선비 포함한 수당 총액 최대 710,000원 (기본급 보조-교직수당) 월 25만원 (인건비보조) 월 30만원 (담임수당) 월 13만원 (장기근속수당-5년이상) 월 3만원	처우개선비 360,000원 [운영지원비에서 30만원 (처우개선비 및 운영비 13,000원 포함) + 추가 지원 6만원] ※ 지자체별 추가 지원 수당 있음	※ 지자체 및 사설유형에 따라 처우개선 수당이 각각 다르게 지원되어 객관적인 비교에 어려움이 있음		실제 격차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비슷한 조건을 위한 설정 누리과정반 1반 / 현원 20인 * 급간식비는 유치원 별도편성에 따라 어린이집도 제외		·보육료 5,200,000원 ·방과후과정 1,400,000원 ·학급운영비 450,000원 = 총 7,050,000원	·보육료 4,200,000원 ·운영지원비 1,100,000원 ·학급운영비 0원 = 총 5,300,000원	-1,750,000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인건비 지원 시설)																		
처우개선비 포함한 수당 총액 최대 710,000원 (기본급 보조-교직수당) 월 25만원 (인건비보조) 월 30만원 (담임수당) 월 13만원 (장기근속수당-5년이상) 월 3만원	처우개선비 360,000원 [운영지원비에서 30만원 (처우개선비 및 운영비 13,000원 포함) + 추가 지원 6만원] ※ 지자체별 추가 지원 수당 있음																			
※ 지자체 및 사설유형에 따라 처우개선 수당이 각각 다르게 지원되어 객관적인 비교에 어려움이 있음																				
실제 격차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비슷한 조건을 위한 설정 누리과정반 1반 / 현원 20인 * 급간식비는 유치원 별도편성에 따라 어린이집도 제외																		
		·보육료 5,200,000원 ·방과후과정 1,400,000원 ·학급운영비 450,000원 = 총 7,050,000원	·보육료 4,200,000원 ·운영지원비 1,100,000원 ·학급운영비 0원 = 총 5,300,000원																	
-1,750,000원																				
정책 제언 또는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유치원과 동일하게 별도예산으로 지원함으로써 모든 유아들의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급간식비로 인해 차별되지 않도록 하여 진정한 의미의 무상급식을 실행할 필요가 있음. - 누리과정의 실행을 계기로 유아의 출발선 평등을 보장한다는 정책 효과뿐만 아니라 부분적인 유보통합의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의미도 있음. 정책 본래의 목적과 의미를 잘 이뤄내기 위해서는 예산 집행과정부터 격차가 있어서는 안되며, 이러한 격차로 인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동등한 수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추진해야 함. 																			

2대 의제명	영아기 보육·교육의 중요성 확립 및 정책 마련		
의제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2세에 해당하는 영아기는 발달적으로 신체적, 심리적 성장과 변화가 가장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시기로서 생애 초기의 발달적 경향성이 영아기 이후 발달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세심하고 전문적인 보육·교육의 지원이 필요하고, 다른 어떤 연령보다도 신중한 교육적 접근이 요구됨.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0년 보육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0-2세 주민등록인구 901,344명 중 78%인 700,890명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음. 이처럼 많은 영아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현시대에서 영아기 아동의 발달에 맞는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차원의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음. - 영아의 높은 어린이집 재원율이 보여주는 사회적 상황과 함께 영아기 보육의 질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보육현장과 학계에서뿐만 아니라 국가적 관심 확대가 더욱 요구되며, 사회정책 및 복지적 대응으로서도 영아보육과정에 대한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연구와 지원의 필요성이 요구됨. 		
정책 제언 또는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의 발달은 영아기를 거쳐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유아와 구분되는 영아만의 발달적 특성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함을 되새기며 사회적 인식 전환을 확립해 나아가야 함.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 과정에서도 0-2세 영아의 발달 및 학습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 vs 보육의 차별이 아닌 0-5세 영유아 전체를 기준으로 대상연령에 따라 전문화·특성화된 교육·보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함. 		

3대 의제명	보육교직원 권익증진 및 전문성 강화 방안 마련
의제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은 영유아에게 8시간 이상의 교육·보육을 제공하는 곳으로 제2의 가정이나 다름없는 곳으로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여러 편견과 오해, 불이익을 받고 있음. - 영유아가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영유아의 권리뿐만 아니라 보육교사의 권익증진과 전문성 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의 연구보고에 의하면 보육교직원의 인권 침해 사례가 다양하고 일상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 부적절한 요구를 넘어 갑질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권리침해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직원은 권리를 보장받기 어렵고 스스로 자신이 권리를 옹호하거나 기본권을 주장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2012년 전연령 무상보육 시행 이후 영유아의 기관 양육 의존도가 늘어나고 보육서비스에 대한 부모의 요구와 기대가 다양해지면서 보육교사의 전문성 확보 역시 매우 중요해진 상황임. - 일부 언론에서 자극적으로 다루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로 인해 보육교사의 이미지가 손상되고 보육의 가치가 평가절하되는 상황을 만들고,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보육교직원의 소진이나 타 직종으로의 이직을 고려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정책 제언 또는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직원의 자격 및 호봉제도, 사회적 인식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보육교사의 양성체계를 학과제 중심으로 개편하고, 학력에 따른 호봉인정제도를 도입한다면 유치원교사와 동등한 수준으로 균형을 이루게 되어 영유아교사의 질적 수준 상향 평준화와 함께 보육교사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 및 전문성 향상에 대한 의욕 상승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수한 보육교직원을 양성하고, 보람을 느끼며 전문적인 교육·보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각종 대중매체에서 자극적인 소재로서 어린이집 관련 기사를 이슈화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며, 보육교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극적인 대응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함.

4대 의제명	어린이집 업무환경 개선
의제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의 장시간 근무와 과도한 업무량 등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그에 비해 처우는 낮아 전문성 있는 보육교직원들이 보육현장을 떠나고 있고, 새로운 보육교직원의 진입률도 낮아 보육현장에서는 보육교직원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어린이집 업무환경 개선이 꼭 필요한 시점임.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은 7:30~19:30으로 연장보육전담교사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 당직 등으로 보육교직원의 추가근무를 조장할 수 밖에 없는 근무환경이며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근무시간을 존중받을 수 없는 구조임. - 긴 근무시간임에도 점심시간, 휴게시간과 휴가 활용이 자유롭지 못하고, 과도한 업무량 및 지나치게 많은 필수무교육으로 인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이 감당하기 힘든 근무환경을 만들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정책 제언 또는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직원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임에도 불구하고 보육 관련 정책에서는 우선순위로 고려되지 못하고, 가장 악자로 소외되는 상황에 놓여 있음. 보육교직원의 힘든 업무환경을 조장하는 가장 구조적인 문제는 보육교직원을 위한 정책과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임. - 연장보육전담교사 제도의 본 목적에 따라 오전 당직 시간과 16시를 연장보육 기준시간으로 인정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시간을 현실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보조교사나 대체교사 대신 비담임교사를 배치하여 보육교사의 점심, 휴게시간 및 휴가를 대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함. - 꼭 필요하지 않은 행정업무와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 필수무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와 축소가 추진되어 보육교직원이 영유아의 보육·교육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해야 함.

5대 의제명	어린이집·유치원 통합 추진
의제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의 영유아 교육·보육제도는 설립목적과 취지에 따라 3~5세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과 0~5세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러한 제도의 이원화로 인해 영유아에게 차별적 교육·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오랜 시간 동안 보육과 유아교육의 일원화는 꾸준히 추진되었고, 최근 사회적 변화와 함께 국가 차원의 공보육이 강조되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기능이 점점 유사해지고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더욱 통합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유아교육과 보육이 각각 나누어지다 보니 지원체계, 평가체계, 행정인력, 서비스 기관 등 모든 체계가 이원화되어 관리·감독 되어 행정운영과 재정투자에서 비효율성을 가져오고, 이로 인해 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평등한 출발선을 제공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함.

- 운영체제의 이원화로 인해 유치원, 어린이집 간의 교사 자격, 시설기준, 교육비 등 교육환경이 상이하고 교사의 근무여건 역시 달라 교육·보육서비스에서의 질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국제적인 추세 역시 영유아 권리를 기반으로 교육적·발달적 혜택 및 격차 해소의 성과를 강조하는 교육복지적 관점으로 영아부터 유아까지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교육과 보육이 통합된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표 1, 2 참조).

〈표 1〉 유네스코 표준교육 분류와 한국 통계청의 교육통계 분류

현재				1) 교육프로그램(Educational Program) 분류		
COFOG 대분류, 교육(709)		ISCED-97 (개정 전)	ISCED 2011 (개정 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7091 취학 전 & 초등교육	70911 취학 전 교육	ISCED 0 취학 전 교육	ISCED 01 영아교육	0 영유아 과정 (유치원/ 어린이집)	01 영아 발달	010 영아 발달
	70912 초등교육	ISCED 1 초등교육	ISCED 02 취학 전 교육		02 유아교육·보육	020 유아교육·보육
7092 중등교육	70921 전기 중등교육	ISCED 2 전기 중등교육	ISCED 2 전기 중등교육	1 초등 과정	10 초등 교육	100 초등 교육
	70922 후기 중등교육	ISCED 3 후기 중등교육	ISCED 3 후기 중등교육			
7093 중등 후 비고등교육	70930 중등 후 비고등교육	ISCED 4 중등 후 비고등교육	ISCED 4 중등 후 비고등교육			
7094 고등교육	70941 1단계 고등교육	ISCED 5 1단계 고등교육	ISCED 5 전문(Short-Cycle) 교육단계			
			ISCED 6 학사 혹은 동등 교육단계			
	70942 2단계 고등교육	ISCED 6 2단계 고등교육	ISCED 7 석사 혹은 동등 교육단계			
			ISCED 8 박사 혹은 동등 교육단계			

5대 의제명	어린이집·유치원 통합 추진			
현황 및 문제점	〈표 2〉 국가별 유보통합 담당 부처 및 대상 연령			
	국가	담당부처	통합연도	대상연령
	뉴질랜드	교육부	1986	0-5세
	스웨덴	교육부	1996	0-6세
	영국	교육부	1998	0-4세
	노르웨이	교육부	2005	0-6세
	덴마크	교육부	2011	0-6세
	핀란드	교육문화부	2013	0-5세
정책 제언 또는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의 초저출산율 극복을 위해 교육·보육서비스의 질에 대한 신뢰향상이 중요한 이슈가 되었고, 영유아 교육·보육의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일원적 관리를 재추진함으로써 사회적 갈등 및 격차를 해소하여 전반적인 질 향상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4-2

- 단체명: 아이들이행복한세상
- 담당자: 김영명 / 아이들이행복한세상 대표

□ 5대 정책 의제 (정책우선순)

-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 교사 업무량 축소 및 근무환경 개선
- 실내외 놀이공간 확보
- 유아교육과 보육의 행정관리 통합 일원화
- 영유아 1인당 정부지원액 상향 조정 및 유형별 영유아 1인당 정부지원 차이 해소

1대 의제명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의제 설명	-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은 양질의 보육교육이 이루어지고 영유아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 위해 필수적인 사항임.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된 교사 대 아동 비율은 개선 없이 17년간 유지되어 있음. - 교사 대 아동 비율은 영유아에 대한 세심한 돌봄과 교육, 안전 확보 등 양질의 보육교육이 이루어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 부모 및 보육교직원의 요구조사에서 가장 순위가 높음(영유아의 삶의 질 향상 공약 제안을 위한 단체 연대, 2021). - 2020년 교사 대 아동 비율 법령 개정을 위한 청와대 청원에 대해 부모 및 보육교직원 등 20만 명 이상의 동의가 있었음. - 서울시는 2021년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나 보육 교육의 질적 개선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시급히 전국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정책 제언 또는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해야 하며, 이는 영유아의 삶의 질 향상과 아동학대 및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임. - 그러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의 경우 많은 예산이 요구되므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적극적인 예산 정책이 수반되어야 함.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안은 다음과 같음. <p style="text-align: center;">〈표〉 연령별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안 (단위:명)</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10%;">0세</th> <th style="width: 10%;">1세</th> <th style="width: 10%;">2세</th> <th style="width: 10%;">3세</th> <th style="width: 10%;">4세</th> <th style="width: 10%;">5세</th> <th style="width: 10%;">장애아동</th> </tr> </thead> <tbody> <tr> <td>교 사</td> <td>1</td> <td>1</td> <td>1</td> <td>1</td> <td>1</td> <td>1</td> <td>1</td> </tr> <tr> <td>영유아(현행)</td> <td>3</td> <td>5</td> <td>7</td> <td>15</td> <td>20</td> <td>20</td> <td>3</td> </tr> <tr> <td>영유아(개선안)</td> <td>2</td> <td>3</td> <td>5</td> <td>10</td> <td>13</td> <td>13</td> <td>2</td> </tr> </tbody> </table>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장애아동	교 사	1	1	1	1	1	1	1	영유아(현행)	3	5	7	15	20	20	3	영유아(개선안)	2	3	5	10	13	13	2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장애아동																										
교 사	1	1	1	1	1	1	1																										
영유아(현행)	3	5	7	15	20	20	3																										
영유아(개선안)	2	3	5	10	13	13	2																										

2대 의제명	교사 업무량 축소 및 근무환경 개선
의제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가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노동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영유아 보육에도 소홀해질 수 있어 교사의 교육·보육권이 보장되기 어려운 상황임으로 개선을 요구함.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는 영유아 보육 뿐 아니라 다양한 보육 및 행정 기록업무, 청소, 행사 준비, 부모와의 소통, 평가 및 점검 준비 등의 과도한 업무를 수행해야 함으로써 노동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교사의 업무량 축소와 휴게시간 준수, 연차휴가 사용 등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평가제를 비롯한 부모 모니터링, 열린어린이집, 지도점검, 위생안전급식·CCTV 점검 등 다양하면서 효과적이지 못한 관리 시스템의 운영 및 의무교육 증대 등으로 교사의 업무량은 여전히 과다하며 교사들의 개선 요구가 매우 높은 상황임(영유아의 삶의 질 향상 공약 제안을 위한 단체 연대, 2021). - 휴게시간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업무량의 조정이 없이는 이행이 어려운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임. - 연장보육을 실시하여 휴게 및 업무량 조정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연장보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연장보육 아동의 보육을 여전히 기본보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맡고 있음.
정책 제언 또는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의 노동권, 보육·교육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비효율적·비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관리 체계와 의무교육이 개선되어야 함. - 연차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한 비담임 배치, 청소인력 배치 등 인력 총원, 연장보육 체계 정착을 위한 지원 등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3대 의제명	실내외 놀이공간 확보
의제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육을 받는 영유아의 발달권이 보장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기 위해서 실내외 놀이공간 확보는 필수임. -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은 날이 많으며,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실내 유희실, 실외놀이 공간과 같은 환경 개선이 요구됨.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의 경우 실외놀이터가 인가조건이나 어린이집의 경우 자체 실외놀이터가 없어도 인가가 가능하며, 실내 유희실은 인가조건이 아님. - 제15조의2(놀이터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육 정원 50명 미만인 어린이집 2. 100미터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 - 전국보육실태조사(2018)에서 실외놀이터가 설치된 어린이집은 31.9%이며,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51.9%만 설치되어 있음. 실내 놀이터가 설치된 어린이집은 36.2%임. - 최근 미세먼지가 많은 상황에서 외부 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실내 신체활동 공간이 없음으로써 영유아의 발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 - 실외놀이터와 실내 신체활동 공간이 없는 환경에서 보육을 받고 있는 영유아의 경우 발달권이 심대히 침해받고 있는 상황임.
정책 제언 또는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외 신체활동 공간이 인가조건이 되도록 법령 개정을 해야함. - 물리적 환경 개선은 기인기된 시설의 경우 법률 적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새롭게 인가되는 시설을 중심으로 적용함. - 기존 시설은 실외놀이터, 실내 신체활동 공간, 지역사회 놀이 공간 등 여건에 따라 다양한 실내외 놀이활동 공간이 갖추어져야 함.

4대 의제명	유아교육과 보육의 행정관리 통합 일원화
의제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연령대의 영유아를 유치원은 교육부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이원화된 체제는 차별의 원천이 되고 있으며, 영유아 보육·교육의 질적 개선을 저해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영유아 보육·교육의 체계적인 통합 관리를 통해 영유아 보육·교육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동안 김대중 정부로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유보통합을 위한 노력이 있었으며 지금까지 재정(일부), 평가(일부), 교육과정의 통합 등이 이루어졌음. - 교사 양성체계와 관리부처의 일원화 등 과제를 남겨놓고 있음. - 문재인 정부는 격차해소 후 유보통합을 이루고자 했으나 이원화된 체계에서 격차해소가 제대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음. - 보육과 유아교육의 질적 개선을 비롯하여 아동학대 해결 등 많은 정책 과제를 안고 있으나 보육과 교육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의 부재로 정책 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움.
정책 제언 또는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과 유아교육의 행정 관리 부처를 통합 일원화해야 함. - 통합 일원화의 사안에 대해 운영주체, 교직원, 학계, 부처 등 각 이해당사자의 찬반이 있음. 그러나 일관된 총체적 찬성과 반대가 아닌 사안 사안에 따른 이해득실을 고려한 찬반인 경우가 많은 상황임. - 유보통합에 대해 상당한 사회적 합의가 이미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보육과 유아교육의 통합이 달성되지 못한 데에는 영유아보다는 각각의 이해관계 당사자가 정책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었음. - 향후 보육과 유아교육 행정 관리의 통합 일원화 정책은 차별 없는 영유아의 삶의 질 향상을 중심에 두고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각 이해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이해관계 당사자 간의 합의를 도출해 나가도록 해야 함.

5대 의제명	영유아 1인당 정부지원액 상향 조정 및 유형별 1인당 정부지원 차이 해소
의제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질의 보육·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유아 1인당 정부 지원액을 상향 조정해야 함. -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국공립과 사립(민간, 가정 등) 간 영유아 1인당 정부지원에 차이는 영유아 보육·교육의 질적 차이로 이어져 영유아에 대한 차별의 원인이 되므로 이를 해소해야 함.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1인당 보육·교육 비용 지원이 양질의 보육·교육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며 보육·교육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영유아가 다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국공립과 사립(민간, 가정 등) 등 기관의 유형에 따라 영유아 1인이 지원받는 금액에 차이가 발생됨. - 영유아 1인이 지원받는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인건비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의 차이로부터 가장 크게 발생함. -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동일한 금액의 누리과정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으나 어린이집의 경우 유치원에 비해 장시간 운영되며, 유치원의 경우 급간식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으나 어린이집의 보육료에는 급간식비를 포함시키고 있음.
정책 제언 또는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질의 보육·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영유아 1인당 지원액이 상향 조정되어야 하며 기관의 유형에 따라 상이한 영유아 1인당 지원금을 동일하게 해야 함. - 공사립의 지원 및 운영 체계를 정비하지 않은 채 급간식비, 보육료 등 부분적인 지원금을 일처시기는 것으로는 영유아 1인당 지원액의 차이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유형에 따른 비용 지원 및 관리 체계의 원칙을 확립해야 함. - 재원 확대와 영유아에 대한 공평한 지원에는 사회적 합의가 용이하나 사립(민간) 기관에 대한 지원 및 관리의 원칙이 수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지원 확대 및 관리 강화에 대한 갈등이 지속되어 왔으므로 사립과 민가정의 지위와 지원 및 관리에 대한 원칙이 수립되어야 함. - 유아교육과 보육의 행정관리가 통합 일원화 되는 것과 함께 해결될 수 있음.

4-3

- 단체명: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 담당자: 함미영 /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지부장

□ 5대 정책 의제 (정책우선순)

-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 보육교사 임금차별 철폐
- 보육교사 감정노동 보호조치 (보육교사 매뉴얼 제작, 보육사업안내 반영등)
- 원장담임겸직 및 초과보육 완전 폐지 (농어촌, 탄력편성 등)
- 원마다 1인의 상용직 보육교사 배치


<p>의제 설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사 1인당 OECD 주요국가보다 높은 아동비율로 인해 보육교사의 돌봄 부담이 가중됨. 보육교사의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해 제공되는 서비스 질을 담보하기 어려움. - 전체 보육교사 24만 명 중 71%인 17만 명의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90%가 최저임금수준 - 호봉제가 적용되는 정부 인건비 지원 기관(국공립·법인·직장)과 달리 보육사업안내에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법을 위반하지 않는 최저임금만 지급해도 된다고 명시되어 있음. 경력이 쌓일수록 임금격차가 심해짐. - 숙련된 인력이 안정적으로 일할 유인이 없어 보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음. - 돌봄 서비스 제공에 수반되는 과도한 감정노동에 비해 피해발생 시 보육교사를 보호할 실질적인 보호대책이 없으며, 보호조치 의무자인 원장의 업무해태 이행조치를 강제하거나 처벌할 근거 또한 미약하여 제대로 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거나 피해를 심화시킴 - 보육교사의 돌봄 업무 이외 업무시간 확보, 휴게시간, 휴가 등의 자유로운 사용 등을 위해 인력부족 해소가 필요하여, 대체교사 파견 제도만으로는 필요 시 인력대체가 불가능함
<p>현황 및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ECD 주요국가의 평균보다 높은 교사1인당 아동비율, 낮은 임금, 과도한 초과보육 등 보육교사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이 시급함. -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발생하는 임금차별 철폐 및 방안 마련 필요 - 업무특성상 요구되는 감정노동에 비해 피해발생시 보호조치방안 부족(보호조치 매뉴얼 등), 보호조치 의무자인 원장의 보호조치 해태 등으로 인한 피해 심화 등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반별 정원 탄력편성, 농어촌 지역의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 등에 의해 정해진 교사 대 아동비율이 아닌 추가 보육을 가능하게 해 보육교사의 업무과중 발생. 초과보육 완전 폐지로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보육교사 인력 확충 필요 - 보육기관 운영회계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보육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한 사용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사업 목적외사용, 폐이백 등 비리가 끊이지 않음. - 원장 담임겸직 폐지, 보육교사 인력확충을 통해 보육공백 해소 필요 - 상용직 보육교사를 배치해 돌봄 업무의 특성으로 인한 휴게시간, 휴가 등 사용 시 인력부족, 보육공백 등으로 인한 어려움 해소
<p>정책 제언 또는 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질의 보육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영유아 1인당 지원액이 상향 조정되어야 하며 기관의 유형에 따라 상이한 영유아 1인당 지원금을 동일하게 해야 함. - 공사립의 지원 및 운영 체계를 정비하지 않은 채 급간식비, 보육료 등 부분적인 지원금을 일 치시키는 것으로는 영유아 1인당 지원액의 차이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유형에 따른 비용 지원 및 관리 체계의 원칙을 확립해야 함. - 재원 확대와 영유아에 대한 공평한 지원에는 사회적 합의가 용이하나 사람(민간) 기관에 대한 지원 및 관리의 원칙이 수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지원 확대 및 관리 강화에 대한 갈등이 지속되어 왔으므로 사람과 민간 가정의 지위와 지원 및 관리에 대한 원칙이 수립되어야 함. - 유아교육과 보육의 행정관리가 통합 일원화 되는 것과 함께 해결될 수 있음.

5-1.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5-2. 사교육걱정없는세상

5-3.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박다솜 | 서울교사노조 유아부위원장
(제 2대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



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명: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 담당자: 윤지혜 / 경기 운담초병설유치원 교사
-----	--

□ 5대 정책 의제 (정책우선순)

-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변경
- 5~7세 유아 의무교육
- 학급당 유아수 감축
- 유치원 전면 무상급식
- 유치원 교원양성체제 개편

1대 의제명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변경
의제 설명	<p>* 의제에 대한 개요 및 선정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제 잔재인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여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및 진정한 교육의 출발점 평등 실현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25년간 지속되어 온 지지부진한 유아학교 명칭변경 노력 - 국회에서 계류중인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법안 - 교육기본법상 '학교'임에도 학교라는 명칭 사용하지 못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와의 형평성 및 계열성, 보편성을 위해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시급함) - 일제 잔재 청산 및 민족적 자긍심 고취를 위해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개칭한 전례에 비추어 유치원 명칭도 일제잔재이므로 개칭 필요함 - 부정적 의미의 어휘로 사용되고 있는 '유치'라는 단어를 유아교육기관 명칭으로 사용하기에 매우 부적절함 - '학교'라는 명칭을 통해 교육기관으로서 공공성 강화 및 사회적 인식 제고 - 강아지유치원, 노인유치원, 영어유치원 등 무분별한 유치원 명칭 사용으로 인한 학교기관으로서 위상 저하 - 유치원 입학 지원을 위한 웹사이트 '처음학교로'에서 유치원을 이미 '학교'로 칭하고 있으나, 정식명칭은 아직 '유치원'임
정책 제언 또는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에서 계류 중인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 처리 -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관련 법체계 정비 - 사립유치원 법인화를 통해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 공영형 유치원 및 정부매입형 유치원을 통해 신증설 비용 절감 - 0~4세는 영아학교, 5~7세는 유아학교로 연령이원화 유보체제 개편

2대 의제명	5~7세 유아 의무교육
의제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제에 대한 개요 및 선정 이유 - 5~7세(만3~5세) 유아 의무교육을 통해 유아교육 국가 책무 강화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각국의 유아 의무교육에 대한 중요성 및 요구 증대 - 아동학대 사각지대의 아동학대 조기발견 어려움 - 유아 무상교육 및 무상보육제도 실효성 저하로 인한 개선 필요 (법령상으로는 무상교육이지만, 실제 학부모부담금은 지역별, 기관별 상이)
정책 제언 또는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7세(만3~5세) 유아 의무교육 실시 - 7세부터 단계별로 유아 의무교육 실시 - 0~4세는 영아학교, 5~7세는 유아학교로 연령이원화 유보체제 개편 - 유치원 시설, 설비기준 강화 - 사람유치원 법인화 및 공영형 유치원 확대 등 유아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을 전면 실행 하여, 의무교육 시행 이전에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 마련 - 교육기본법에 유아 의무교육 명시 -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의무화

3대 의제명	학급당 유아 수 감축
의제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제에 대한 개요 및 선정 이유 - 지역별·설립 주체별로 학급 당 유아 수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학급 당 유아 수의 기준을 설정하여, 지역별·설립 주체가 달라서 생기는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유아의 안전과 교육권, 교육과정 실현을 위해 최소 14명 이하, 최대 어린이집 수준으로 유아 수를 감축함.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학급당 최소 및 최대 유아 수는 지역별·설립 주체별로 편차가 큼. - 학급당 유아 수 기준 마련과 관련한 심층 연구는 절대적으로 부족함. - 놀이중심, 유아중심 교육과정 실현을 위한 교실 환경 마련 필요
정책 제언 또는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급당 적정 유아 수 심층연구 실행을 위한 시범학교 운영 - 학급당 유아 수 감축에 대한 단기중장기계획 수립

4대 의제명	전 지역 유치원 무상급식
의제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제에 대한 개요 및 선정 이유 -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모든 유아가 차별 없이 영양가 있고 균형 잡힌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전 지역 무상급식 실행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지역별로 급식 제공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차이가 있음. 따라서 무상급식을 제공받는 지역의 유아와 유상급식을 제공받는 유아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함. - 급식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식품비를 아껴 이윤을 내기 위한 비리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며, 관리 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 제공에 지속적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정책 제언 또는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지역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자원 마련 및 인프라 구축 방안 연구

5대 의제명	유치원 교원양성체제 개편
의제 설명	* 의제에 대한 개요 및 선정 이유 - 유아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유치원 교원양성체제 연한을 4년으로 통일하며, 방송통신대학을 통한 교원자격증을 수여하지 않도록 함.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초·중등교육을 위한 교사의 양성체제는 모두 4년이지만, 유아교육을 위한 교사의 양성체제는 아직 3년(전문대학), 4년(일반대학, 사범대학)으로 혼재되어 있음. 또한 방송통신대학을 통한 사이버강의로도 교원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기에, 타 학교급에 비해 양질의 교육을 담보하기 어려움. -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도 타 학교급 교사와 같이 교수지식과 전문성을 가지고 교육에 임해야 하는 만큼 양성체제 연한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초·중등교원 양성체제는 올해도 개편안이 발표되며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가고 있지만, 유아교육 교원 양성체제는 개편에 대한 논의가 전무하여 발전이 더딤.
정책 제언 또는 과제	- 양성체제 연한을 4년으로 통일하기 위해 전문대학 학과 통폐합 - 전문대학 수요와 비슷하게 4년제 유아교육과 신설

5-2

○ 단체명: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담당자: 양신영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책임연구원

□ 5대 정책 의제 (정책우선순)

- 아동의 발달권,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영유아 인권 보장 4법 개정
- 유아 조기 영어 교육 및 교과 사교육 실태 개선
- 유아교육기관 내 선행 유발 요인 개선
- 양질의 보육·교육을 담보하는 국가 주도 보육 교육 체제 개편 시스템 마련
- 교사대아동비율 축소 / 원아 1인당 공간 비율 개선 및 바깥놀이 공간 확충

1대 의제명	아동의 발달권,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영유아 인권 보장 4법 개정
의제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와 지자체 기관, 보호자에게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책무를 부여 - 영유아 발달 단계에 적합한 교육 내용과 과잉교육의 부작용 및 기준을 연구, 학부모 및 교사 대상 연수 - 영유아를 대상으로 사교육기관이 과도한 인지 교육을 하는 것을 제한 - 이러한 내용을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학원법, 평생교육법에 적용함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5세 유아의 83.6%가 사교육을 받는 등 영유아 사교육이 급격히 확대됨. - 영유아 사교육비 연간 총액 규모는 2015년 1조 2,051억원에서 2017년 3조 7,397억원으로 2조 이상 뛰어넘음. -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15년 3만 7200원에서 2017년 11만 6천원으로 큰 폭으로 상승함. (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 교육·보육 비용 추정연구, 2017) <p>【조기인지교육이 영유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85.2%가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응답. 그 이유로는 '학업 스트레스(95.7%)'가 가장 높고, '학습에서의 자율성 저하(69.6%)', '낮은 학습효과', '창의력 저하(60.9%)' 순으로 나타남. <p>【조기인지교육 교육과정 중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하지 않은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도한 학습시간(70.4%)'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레벨테스트 및 지필평가(33.3%)', '많은 사교육 가지수(33.3%)' 순. 이는 사교육 받는 시간과 갯수가 많을수록 영유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함. <p>【조기인지교육을 받는 영유아들에게 나타나는 부작용 증상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짜증, 분노, 공격성 등 감정조절의 어려움과 같은 정서문제(51.9%)', 부모와의 관계 악화 문제(48.1%), 학습 거부와 같은 행동문제(40.7%)' 증상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전문의들은 답함. 조기 인지교육이 아동의 건강한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p>【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놀이시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의 대부분인 92.6%가 '최소 1시간 이상' 놀이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40.7%가 '최소 3시간 이상'의 놀이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응답. 아동에게 있어서 놀이시간의 확보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확인하였음.
정책 제언 또는 과제	<p>'영유아 인권법' 제정하여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의 과도한 인지학습을 제한하여 적기교육의 중요성 및 놀이의 필요성을 확산함으로써 영유아의 놀 권리, 쉼 권리를 보장할 것으로 기대함</p>

2대 의제명	유아 조기 영어 교육 및 교과 사교육 실태 개선
의제 설명	<p>‘고비용, 장시간의 교습 행위’에 노출되어 있는 영유아 아동들의 건강한 발달과 놀 권리 보장을 위해 유아대상영어학원 및 영유아대상 교과 사교육에 대한 충분한 관리·감독 필요</p>
현황 및 문제점	<p>【유아대상 영어학원 수】 - 서울시 반일제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전년보다 6곳 늘어난 294개였으며, 강남·서초, 강동·송파 지역에 제일 많은 136곳(46.2%)이 집중되어 있음.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오히려 증가세를 보임.</p> <p>【유아대상 영어학원 비용】 - 월평균 총학원비는 109만 6천원으로, 연단위로 환산하면 약1,315만원으로 4년제 연평균 대학등록금 672만원의 약 2배, 최고액 학원의 경우 무려 4.7배(3,178만원)에 달함.</p> <p>【유아대상 영어학원 교습시간】 - 일평균 교습시간은 4시간 56분으로 초등학교 1,2학년 수업시간보다 길고, 중학교 수업시간과 비슷한 수준. 교습시간이 가장 긴 학원은 10시간 5분(605분)동안 영어학습에 노출됨.</p> <p>【사립초 학부모 부담금】 - 서울 사립초의 연평균 학부모 부담금은 약 983만원으로 연평균대학등록금의 1.5배에 해당, 최고 1,500만원에 가까운 학교도 있음. ‘유아대상영어학원(2년)+사립초(6년)’의 8년간 학비는 최대 총 1억 4428만원임. - 강남의 유명 유아대상 영어학원 레벨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 개인과외를 받고, 시험준비를 사고 파는 경우도 발생.</p> <p>【조기영어교육이 영유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 전문의 70.4%가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 이유로는 가장 많은 수가 ‘정서발달에 부정적(89.5%)’이라고 응답. ‘낮은 학습 효과(42.1%)’, ‘영어 학습 거부(21.1%)’ 순. 전문가들은 조기영어교육이 발달의 측면, 학습의 효율성 측면에서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우려함.</p> <p>【조기영어교육 교육과정 중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하지 않은 활동】 - ‘비디오, 스마트폰 등 영어 영상물(48.1%)’ 시청활동, 뒤이어 ‘이머전 교육(37.0%)’, ‘영어 원서 읽기(33.3%)’ 활동 순으로 부적합하다고 응답. 이와 같은 활동들은 유아대상 영어학원에서 흔히 활용되는 수업방식으로서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심각하게 제고될 필요가 있음.</p>
정책 제언 또는 과제	<p>-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는 사이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어 수위가 높고 있음. 이는 방역 상의 위험은 물론이고 교육의 출발선 붕괴와 아동의 발달 격차로 이어질 소지가 큼.</p> <p>- 영유아 교재·교구의 허위과장, 비교육적 홍보를 비롯해 영유아의 발달을 저해하는 사교육 실태가 날로 심각해짐에도 기초적인 통계조사조차 실시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영유아 사교육 통계 조사를 비롯해 발달권을 침해하는 상품 판매를 규제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함.</p> <p>- ‘아동의 삶의 만족도, OECD 최하위’라는 오명을 벗고, ‘고비용, 장시간의 학습 노동’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영유아 발달권 보장을 위한 4법 개정’이 속히 이루어져야 함.</p>

3대 의제명	유아교육기관 내 선행 유발 요인 개선
<p>의제 설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어린이집·유치원에서는 특별활동·특성화프로그램을 통해서 외국어 등 언어 분야, 수리·과학 등 창의 분야의 이름으로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 등 인지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 이는 초등학교 입학 전 선행교육을 유발하여 초등입학후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침해, 교사의 교습권 침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저하, 지나친 속도 경쟁 유발,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으로 이어짐.
<p>현황 및 문제점</p>	<p>【영유아 특별활동 참여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 2019년 영아의 어린이집 특별활동 참여 과목 개수를 살펴보면 3개를 이용한다는 영아가 30.5%로 가장 많았으며 2개 이용이 24.6로 그 다음을 차지, 절반이상이 2개 이상을 이용. 과목당 비용은 23,463.8원으로 조사됨. - (유아) 2020년 유아의 경우 유치원의 특별활동 수는 어린이집 3.0개, 유치원은 2.9개, 비용은 어린이집 6만6천원, 유치원 7만4천원, 반일제이상 학원은 22만 8천원으로 조사됨(육아정책연구소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 2020) <p>【사립유치원 전수감사 결과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교육청, 2019년 1월~11월까지 6차례에 걸쳐 발표한 경기지역 248개원에 대한 사립유치원 전수감사 결과 <p>▲ 설립자 겸 원장이 영리 업무 종사 금지 원칙을 위반하거나 친인척의 명의로 학원(교재·교구 업체)을 동시에 운영하고, 유치원 재정·시설·정보를 학원의 영리 목적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18개 유치원(감사처분확정된 152개원의 약 11.8%에 해당)에서 적발됨.</p> <p>사례 ① : 같은 건물에 3개 이상의 학원을 동시 운영, 타 영리업체의 대표자로 겸직 근무 사례 ② : 방과후과정 및 체험활동을 가족이 운영하는 학원에 위탁 사례 ③ : 배우자 운영 학원 시설공사 및 각종 공과금 및 유지보수 용역료를 유치원 회계에서 부당 집행, 타 영리업체 대표자 겸직 사례 ④ : 설립자 운영하는 학원의 무인가 체육시설 이용 및 시설 관리 비용을 유치원 회계에서 집행 사례 ⑤ : 배우자 운영 학원에서 영어 특성화 교육 실시, 유치원 통학차량으로 배우자 운영 학원생 하원, 배우자 운영 학원의 통학 차량 임차료 및 차량 유지비 전액 유치원 교비로 집행 사례 ⑥ : 남편을 정교사로 채용, 학원 2곳 원장 겸직 근무하며 급여 수령, 학원과 위탁교육계약 맺고 체험프로그램 장소 제공</p> <p>▲ 유치원 방과후과정 특성화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① 정규교육과정 이후 반드시 방과후과정에서 만, ② 해당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에 신청(동의)한 학부모의 자녀를 대상으로, ③ 유아 1인당 '1일 1개 1시간 이내' 주 5개 이내로 운영하라는 지침을 위반하고 과도한 학습을 유발하는 유치원은 54개원(중복제외, 감사처분확정된 152개원의 약 35.5%에 해당)으로 조사됨.</p> <p>▲ 정규교육과정시간에 만3~5세를 대상으로 매일 주5회 영어수업을 배치한 후 원어민수업까지 더하여 주6회나 영어특성화수업을 진행하거나, 설립자 본인 혹은 배우자가 운영하는 어학원에 위탁하여 주5회 회당 1시간 30분씩 수업을 진행, 혹은 어학원에 4백여명의 원생을 대상으로 24차시의 영어수업을 배정하는 등 휴식과 놀이위주가 아닌 학습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문제가 심각함.</p> <p>▲ 바깥 놀이 시간이 1시간 미만인 유치원도 다수.</p>
<p>정책 제언 또는 과제</p>	<p>'놀이중심, 유아중심'이라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의 본래 취지가 어린이집·유치원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되고 어린이집·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전국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방과후 과정, 특히 영어 프로그램의 과잉 운영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p>

4대 의제명	양질의 보육·교육을 담보하는 국가 주도 보육 교육 체제 개편 시스템 마련
의제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세 발달에 대한 전문 지식과 태도를 갖춘 교사가 영유아를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주도 보육·교육 체제 개편 시스템을 마련해 영유아 발달, 놀 권리 보장 - 기관 지원 및 관리의 일원화 및 재원 확보, 교사 양성과정 개편을 통한 교사 전문성 향상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 유보통합 추진이 확정되어 단계적인 로드맵 제시와 함께 3~5세 무상교육과 영아 무상 보육이 시행되어 80%가 넘는 영유아들이 유아교육·보육 시설을 이용하고 있음. 현재는 관리부처가 통합되지 않아 지역, 기관의 유형과 시설의 형태에 따라 교사양성과정, 교사 인건비와 학급 운영비, 급식비 등에 대한 차등 지원이 이루어지고 시설간 격차가 발생함. - 한 연구에 따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부모들은 유보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62.9%)이 필요 없다는 의견(37.1%)보다 훨씬 더 많이 나타남.(지경애, 유보통합에 대한 유치원·어린이집 부모의 인식, 2018) - 오늘날 국제 사회는 평생학습체제와 교육복지라는 관점에서 영유아들의 주체적인 교육권 보장을 강조하고 있음. - OECD 또한 질 높은 영유아교육을 강조하며 교육부로의 통합을 권고하고 있음. - 선진 각국이 영유아기를 독립적인 교육 제도로 시작하는 것은 “영아기부터 시작되는 질 높은 교육적 개입은 유아기의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초등학교 단계에서의 학력 격차를 완화하며 궁극적으로 성공한 시민으로 성장하게 돕는 가장 중요한 교육 투자이기 때문임. 아울러 미래 사회에서는 개인의 역량이 중요하며 영유아기의 교육은 바로 이런 미래 역량의 토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 프랑스, 미국 등에서는 의무교육제도의 도입을 통해 학제를 확대하여 교육기본권을 확보하고, 평등한 유아교육과 보육을 실현해 나가고 있는 추세임.
정책 제언 또는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기는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발달·보호되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임. 질 높은 통합된 영유아교육체제를 만드는 것은 영유아들의 행복한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급한 사안임. - 영유아 발달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국가적 체계를 마련하여 어린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실현해야 함. - 그러나 ‘학교’라는 명칭을 쓰게 될 때 국가가 영유아 아동의 교육을 책임진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도 주지만, 입시 경쟁 유발 선행교육이 더 조기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앞서 발표한 의제1, 2, 3의 과제가 필수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5대 의제명	교사대아동비율 축소 / 원아 1인당 공간 비율 개선 및 바깥놀이 공간 확충
의제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서는 적절한 교사 대 영유아의 비율의 기준 선정이 필요함. 교사 대 영유아의 비율의 따라 교사와 영유아간의 상호작용의 횟수와 질이 달라질 수 있고 교사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양과 질이 차이가 나타남. - 세이브더칠드런(2019) ‘학교놀이환경의 변화가 아동발달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의하면 놀이환경 개선은 아동의 자존감, 또래관계의 질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아동의 삶의 질을 높인 데 기여하여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우리나라 영유아들이 생활하는 환경을 놀이친화적 환경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공간개선문제가 선결적으로 해결되어야 함.
현황 및 문제점	<p>【교사대아동비율 축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우리나라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은 어린이집 영아반(0~2세)의 경우 OECD와 EU 국가자료와 비교할 때 높은 비율은 아니지만 유아반(3~5세)반은 다소 높은 편임. - 전문가 조사결과 어린이집 영아반의 경우 현행 규정에서 교사 대 영아 수를 1명, 유아반의 경우는 각 연령에 따라 3~7명을 줄이는 것을 제안하였음.(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 교육·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한 환경조성방안-교사 대 영유아 비율의 적정기준 마련 연구, 2015)

	<p>【공간확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영유아 1인당 어린이집 면적 기준은 보육실면적 2.64㎡(0.8평), 실외공간면적(옥외놀이터) 3.50㎡(1.1평)으로 최소한의 요건에 맞추고는 있으나 이는 OECD 평균인 3.6㎡(1.1평), 8.9㎡(2.7평)에 못미치는 낮은 수치임. (육아정책연구소, 아동의 창의성 증진을 위한 학교환경 연구, 2017) - 게다가 보육실면적에는 아이들이 주로 머무는 공간인 보육실 외에 거실과 공동놀이실이 포함된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아이들의 생활공간은 더 비좁은 것이 현실임. - 이에 대해 육아정책연구소는 2017년 보고서를 통해 해외 국가에서는 어린이집의 시설 설비 기준과 규정에서 유아의 놀이 동선까지 고려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영유아의 다양한 실내외 놀이와 공간구성에 대한 적정 기준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안전하면서도 영유아의 놀이를 보장할 수 있는 환경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
<p>정책 제언 또는 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대아동비율 축소 개선안에 따라 구비 요건 추가되는 재정 규모가 상이하기 때문에, 국가 예산, 정책 환경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여 교사 대 유아 비율 개선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를 정책목표로 두고 있는 이 때, 양적 확대 측면 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을 함께 고려하여 어린이집을 포함한 국내 유보육시설의 실내 및 실외놀이터 마련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권고 방침 마련이 필요함. 정부부처간 긴밀한 협조하에 기존 여러 시설들을 아동의 놀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 검토하는 것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실제적인 현장의 필요를 채울 수 있을 것임.

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명: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경기지부 ○ 담당자: 도승숙 /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경기지부 부지부장
-----	---

□ 5대 정책 의제 (정책우선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 보육 통합 ○ 학급당 학생수 상한 법제화 ○ 영유아 돌봄 국가 책임제 ○ 유치중등 교육 정상화와 완전 무상교육

1대 의제명	유아 교육 보육 통합
의제 설명	- 유보통합은 이원화된 정책으로 인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동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며 이를 통하여 교육의 공공성과 평등성을 실현한다.
현황 및 문제점	- 유아교육과 보육은 이원화되어 있는 현 체제로 인해 생애 첫 시기인 유아기부터 불평등한 교육 환경과 교육 격차를 발생시키고 있다.
정책 제언 또는 과제	-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이 논의의 중점은 부모의 양육비 부담완화, 혹은 저출산 해결 등 사회적 문제에 치우쳐져 있는 면이 있다. 이제는 '아동권리 보장'과 교육적인 시각이 중심이 되는 유보통합 정책이 진행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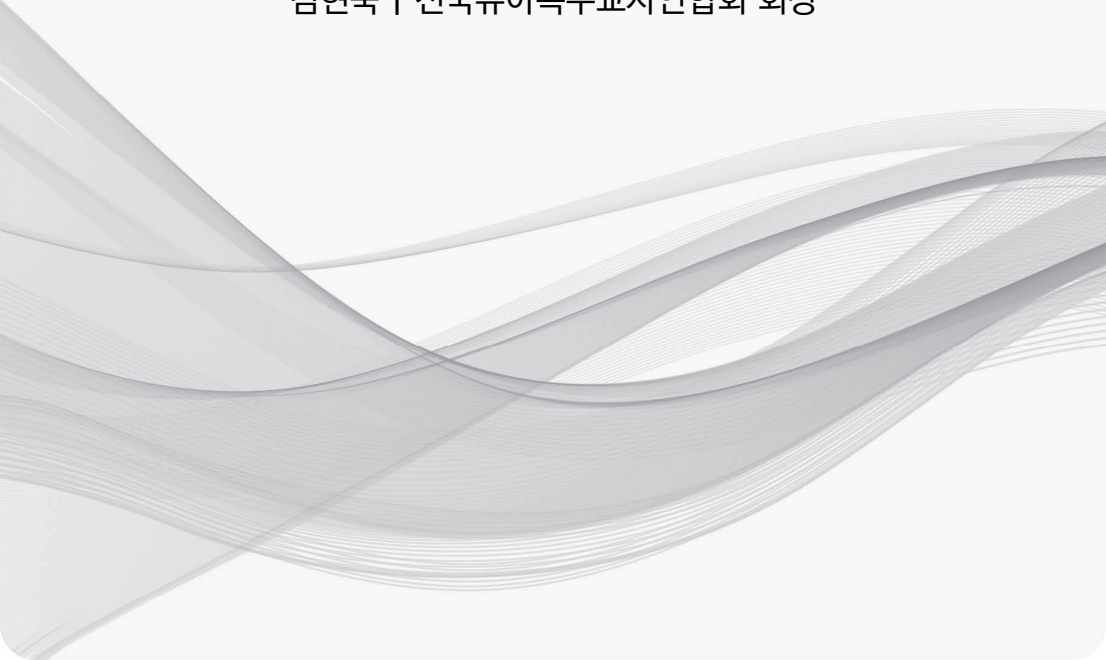
2대 의제명	유아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 법제화
의제 설명	- 유아 학급당 15명 상한제 법제화 -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아닌 학급당 상한제 법제화는 개인별·맞춤형 교육과정을 위한 수업 혁신과 교육 여건 개선의 토대이며,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책이다.
현황 및 문제점	- 학령인구 감소와 코로나 대유행 상황 등에서 드러난 과밀학급의 문제 등 열악한 교육 여건에 대한 문제 해결과 소규모 맞춤 교육으로 전환되는 미래 교육으로의 혁신이 필요하다.
정책 제언 또는 과제	- 과밀학급의 문제는 유아들의 교육권과 보호권의 심각한 침해다. 그러나 우리 교육은 학령인구가 급감한다고 교육재정을 계속 감축해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를 교육에 적용시키는 관료들이 존재한다. 교육은 우리 미래세대의 역량 강화와 건강한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할 투자이다.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재정 확대가 필요하다.

3대 의제명	영유아 돌봄 국가 책임제
의제 설명	- 영유아 돌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이며 국가의 책임제로 전환할 시기이다.
현황 및 문제점	- 코로나로 인해 돌봄 시설과 서비스의 부족, 교실과 돌봄에 대한 인식과 지원의 부족으로 인해 돌봄의 공백이라는 문제가 일어났으며 이는 개인 혹은 가정의 큰 부담으로 드러났다.
정책 제언 또는 과제	- 돌봄의 문제는 더 이상 가정의 문제로 비난받아서 안 된다. 돌봄이 필요한 아이에게는 당연하게 국가가 돌봄을 제공해 주어야 하며 이는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적 돌봄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4대 의제명	유초중등 교육 정상화와 완전 무상교육
의제 설명	- 모든 학생들의 교육 받을 권리 -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의 기회가 제한되고 불평등해서는 안 되며 무상교육은 교육의 공공성과 평등성의 기초이다.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교육 격차의 문제, 경쟁 사회의 심화, 사교육 시장의 비정상적인 활성화 등 많은 사회적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교육의 불평등 문제는 점점 양극화되고 있으며 이는 가정의 경제 수준이 아이의 교육 수준을 담보하는 문제로까지 나타나고 있다.
정책 제언 또는 과제	- 우리나라의 유초중등의 모든 교육은 입시교육의 영향을 받고 있다. - 학교 급별로 올라갈 때마다 모든 교육의 본질보다 입시에 매몰되어 있는 공교육을 바로잡고 대학 서열화와 학벌 성공의 신화를 벗어나야만 서열 사회를 전환할 수 있다. 완전 무상교육의 실현은 교육의 불평등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

- 6-1.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 6-2.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 6-3.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를위한
추진연대
-

김현숙 |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회장



6-1

- **단체명: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 **담당자: 장명숙 /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

□ 5대 정책 의제 (정책우선순)

- **장애영아와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조기 발견 및 중재 체계 마련**
-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의무교육권 보장**
- **유치원 내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
- **특수교육대상유아 방과후과정 확보**

1대 의제명	장애영아와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조기 발견 및 중재 체계 마련
의제 설명	- 장애영아와 특수교육대상유아는 가장 급변하는 생애주기로 적합한 교육이 제공되었을 때 2차 장애를 예방하고 학령기, 청소년기, 성인기의 삶의 질을 결정하므로, 조기 발견 및 조기중재의 체계 마련이 필요함.
현황 및 문제점	- 모든 영유아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해 신체 및 발달 상의 지연을 확인하고 선별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어 있으나 건강검진 후 교육기관과의 연계 혹은 후속 상담의 지원이 부재하여 적기에 중재가 제공되지 못함. - 조기에 발견하여도 장애영아, 특수교육대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현저하게 부족함.
정책 제언 또는 과제	- 영유아검진과 연계된 장애영아 조기 발견 체계 마련 - 장애영아의 개별적인 교육요구에 따라 다양한 지원 체계 마련 - 장애영아와 특수교육대상유아 보호자 양육상담 및 지원체계 구축

2대 의제명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의무교육권 보장
의제 설명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대상임. 충분한 의무교육을 수혜받을 수 있도록 기관 확충이 요구됨.
현황 및 문제점	- 특수학급 신설 시 안전(예: 스프링클러 미설치)을 사유로 인가를 하지 않거나, 혐오대상으로 인식하여 관내 소외지역에 특수학급 증설을 권유하는 등 차별이 여전함. 특수학급 신설에서 차별금지 조항이 필요함. -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유형 및 특성상 분리된 교육환경이 필요할 수 있음. 특히 장애영아의 경우 장애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경우 등록이 되는 점을 미루어보아 중도중복장애일 가능성이 높기에 개인 중심의 집중 교육이 필요함. 특수학교 신설 시 영아 및 유치원 과정 의무화가 필요함. - 유치원 과정 특수학교는 장애전담어린이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어 보호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음. 보호자의 자녀 교육기관 선택권 존중을 위해 교육기관의 다양화가 필요하므로, 유치원 과정 특수학교의 확대 필요함. - 전국의 시도간 특수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공립 통합유치원 증설이 필요함. 특히 유아기에는 완전통합교육을 실행할 수 있도록 통합유치원 확대 및 특수학급의 연령별 배치가 필요함.
정책 제언 또는 과제	- 특수학급 신설 시 차별금지 조항 마련 - 특수학교 신설 시 영아 및 유치원 과정 의무화 - 유치원 과정 특수학교, 통합 유치원 확대 - 특수학급의 연령별 배치

3대 의제명	유치원 내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
의제 설명	- 유아교육법에 통합교육, 특수교육대상유아, 특수학교(유치원) 교사에 대한 내용이 전무하므로 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 마련
현황 및 문제점	- 유아교육법은 제15조 특수학교에서 특수학교의 목적과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가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 따로 입학절차, 교육과정 등을 마련하여 통합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을 뿐 특수학급, 특수교사(유치원)에 대한 언급이 전무함. 초·중등교육법처럼 특수학교(55조), 특수학급(56조) 통합교육(59조)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22조 교원의 자격에 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특수학교(유치원)교사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야 함.
정책 제언 또는 과제	- 유아교육법 개정

4대 의제명	특수교육대상유아 방과후과정 확보
의제 설명	- 유치원은 교육과정운영 이후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방과후과정 참여에 차별 금지 필요
현황 및 문제점	- 특수교육대상유아는 방과후과정에 참여하려면 참여를 거부(배제)당하거나 별도의 지원인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지원인력이 없을 경우 특수교사가 방과후과정까지 지원하도록 요구받아 불공정한 근무환경에 노출되고 있음. - 교육과정반은 통합교육을 실행하나, 방과후과정에서 특수교육대상유아는 따로 운영하도록 요구하여 분리교육을 조장하기도 함.
정책 제언 또는 과제	- 통합방과후과정 실행 - 특수교육대상유아 방과후과정 지원인력 배치

6-2

- 단체명: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 담당자: 김현숙 /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회장

□ 5대 정책 의제 (정책우선순)

-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진단·선정 및 배치 관리 시스템 구축
- 보편적 교육과정이 실행되는 모든 유아를 위한 유아학교
- 국가가 책임지는 내실있는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의무교육 실행
- 장애영아 무상교육 체제 강화
- 특수학교(유치원)교사의 법적 지위 보장 및 승진체계 마련

1대 의제명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진단·선정 및 배치 관리 시스템 구축
<p>의제 설명</p>	<p>* 의제에 대한 개요 및 선정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적 요구가 필요한 영·유아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항임. 특수교육대상영·유아를 진단하고 선정하여 교육기관에 배치하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상자 관리가 필요함.
<p>현황 및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특수교육통계에서 제시되고 있는 대상자 수는 교육기관에 배치된 대상자임. 이것은 교육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지 실제 특수교육이 필요한 영유아기 대상자의 수가 아님. 따라서 현재 특수교육이 필요한 영유아의 전수가 파악되지 않고 있음. - 장애영아와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분화된 체제를 따라 기관을 이용하고 있음. 그로 인하여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전체 수를 파악하는데 어려움 있으며 교육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특히 대상자 분류기준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달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파악할 수 없음.
<p>정책 제언 또는 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선정) ICF에 근거한 대상자 분류와 통계 일원화를 통한 영·유아기 특수교육대상자 전수 통계 조사 - (배치) 장애영아와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위한 특수교육기관 확충 및 유치원 특수교사 충원/ 처음학교로 개통 전 차기년도 유치원 배치계획 수립 - (관리 시스템) 특수교육지원센터 관련 업무 시스템 강화 및 지원, 인력보충

2대 의제명	보편적 교육과정이 실행되는 모든 유아를 위한 유아학교
의제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제에 대한 개요 및 선정 이유 - 3~5세 유아라면 어떤 유아라도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짐. 미래 유아학교는 모든 아이를 포함하는 보편적 교육과정이 실행될 수 있는 체제가 실행되어야 함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기는 생애 중 급격한 발달과 진보를 보이는 시기로 적합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하기에 유아기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고 공적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립, 민간에 의존율이 높아 일정한 수준의 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특수교육대상유아의 경우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따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교육을 받고 있으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녀도 동일한 교육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특히, 특수교육대상유아가 유치원 방과후 과정에는 참여하기 위해서는 보조인력과 같은 추가적인 지원이 수반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없어 모든 아이들을 포함하는 교육과정이 실행되지 못하고 있음
정책 제언 또는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책임제) 모든 유아의 의무교육 실행 - (보편적 교육과정 실행) 모든 유아를 포함하는 방과후 과정 운영 확대

3대 의제명	국가가 책임지는 내실있는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의무교육 실행
의제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의무교육이 내실있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근거리에 갈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기관이 마련되어야 하고, 적합한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유아특수교사가 배치되어야 함. - 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장애유형 및 능력에 따라 학부모가 원하는 유형의 특수교육기관인 유치원 특수학급, 특수학교 유치원과정, 유치원과정의 특수학교(유아특수학교) 등 여러 유형의 특수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특수교육대상유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요구함. - 유아기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해주고, 전문적인 유아특수교사가 교육을 제공해주는 유아특수학교가 필요하기에 유치원과정의 특수학교(유아특수학교)가 필요하며,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영아의 교육을 위해서 특수학교 신설 시 영아 학급의 의무설치가 필요함.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7조 2항에 의거 의무교육대상인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장애 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가 되어야 함. 그러나, 특수교육대상유아는 가까운 곳에 갈 수 있는 특수학교(급)가 없어 멀리 있는 기관에 가거나, 특수학급이 미설치된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빈번함. -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장애유형 및 능력에 따라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특수교육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이 되어야 함. 하지만 이들을 위한 특수학급, 특수학교의 유치원과정이 매우 부족하여, 가족들의 선택권을 침해함. - 특수학교의 유치원과정에 설치되어 있는 학급수도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특수학교 안에서도 유치원과정이 소수이기 때문에 유아기 발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어려운 현실임. 또한 유아기에 적절한 교육을 제공해줄 수 있는 유치원과정의 공립특수학교(유아특수학교)는 전국에 한 곳만 있는 실정이므로 확대될 필요성이 있음. -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이 1:1인 통합유치원이 운영되고 있으나, 특수교육 5개년 계획에 따르면 각 시도별 1개원 설치가 목표임. 특수교육대상유아의 교육실제로 가장 추천되는 방법은 통합교육임. 또한 특수교육대상유아의 교육기관이 현저하게 부족한 실정임. 특수교육대상유아에게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기관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통합유치원 증설이 필요함.
정책 제언 또는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리 배치) 특수학교(급) 신설 - (기관의 다양성) 특수학교 신설 시 영아 및 유치원 과정 설치 의무화/ 유치원 과정 특수학교 신설 - (통합교육 내실화 및 기관 확충) 각 시도의 통합유치원 확대 및 완전통합교육 실행에 따른 배치방법 개선

4대 의제명	장애영아 무상교육 체제 강화
의제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영아 및 장애위험영아의 2차 장애 예방을 위하여 조기발견 및 조기중재는 매우 중요함. 우리나라는 영유아발달검사를 통해 발달지연, 특수교육적요구가 필요한 영유아를 발견할 수 있으나 특수교육기관으로 연계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조기중재가 어려움. - 또한, 장애영아는 장애유형에 따라 지원범위가 넓고 다양한 요구를 가지기에 획일화된 정책, 기관형태로는 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음.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을 기준으로 장애영아는 369명이고 특수교육대상유아는 7,197명으로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수에 비해 장애영아의 수가 현저히 적음. 장애영아는 무상교육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건강검진과 연계된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영아가 매우 많기 때문임. - 또한, 장애영아가 특수교육을 받고자 하여도 갈 수 있는 영아학급이 매우 적음. 장애영아를 위한 학급이 전무한 시도도 있음. 적절한 시기에 조기중재를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장애영아의 교육을 위한 영아학급의 설치 및 확대가 매우 필요함.
정책 제언 또는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발견) 영유아 건강검진과 연계된 조기발견, 조기개입 시스템 구축 - (다양한 교육지원) 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따른 다양한 지원 서비스 마련 - (전문성 있는 교육지원) 장애영아 거점 지원센터 건립 및 담당 유아특수교사 총원

5대 의제명	특수학교(유치원)교사의 법적 지위 보장 및 승진체계 마련
의제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에 특수학교(유치원)교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80%의 교사가 유치원에 근무하고 있음에도 특수학교(유치원)교사의 자격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고 있음. - 또한, 유아특수교육을 전공한 장학사, 연구사, 관리자 등이 없어 통합교육 실현, 일관성 있는 정책 실행이 불가능함.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학교(유치원)교사 중 대부분이 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유치원 운영의 근거가 되는 유아교육법에 이에 대한 언급이 없어 특수학교(유치원)교사는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함. - 유치원 특수교육은 영아와 유아를 모두 아우르고,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순회교육, 지원센터까지 대상과 기관유형에서 매우 다양함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전공 장학사, 연구사의 부재로 정책이 수립되지 않거나 일관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 특수교육 5개년 계획에 따라 각 시도에 통합유치원을 설립하고 통합교육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고 있음. 연구에 따르면 내실있는 통합교육은 관리자의 운영 철학에 따름. 그러나 특수학교(유치원)교사는 법적으로 유치원의 관리자가 될 수 없으므로 제도개비가 필요함.
정책 제언 또는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지위 확보) 유아교육법 제22조 개정 - (승진체계 마련) 시도별 장학사 선발, 교육부 및 특수교육원 내 연구사 선발, 교감(원감) 자격 연수 개설

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명: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를위한 추진연대 ○ 담당자: 이해연 /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를위한 추진연대 사무총장
-----	---

□ 5대 정책 의제 (정책우선순)

- 유보 격차 해소를 위한 행정지원체계의 일원화
- 장애영유아 선정 및 배치체계의 일원화
- 장애영유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특수교사의 배치
- 장애영유아의 교육 및 재활을 위한 로드맵 개발 및 실현
- 장애영유아 가족 지원의 활성화 대책 마련

1대 의제명	유보 격차 해소를 위한 행정지원체계의 일원화
의제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제에 대한 개요 및 선정 이유 - 행정지원체계의 일원화로 대상 영유아들이 동등한 교육보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보 행정지원체계의 이원화로 인하여 유보 간 격차와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가 불가피함. - 영유아와 부모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음.
정책 제언 또는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한 관리와 예산지원이 가능한 행정체계를 갖춘 유보통합 부처 설치

2대 의제명	장애영유아 선정 및 배치 체계의 일원화
의제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제에 대한 개요 및 선정 이유 - 장애영유아 선정 및 배치 체계의 일원화로 인해 불평등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음.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장애영유아 선정 및 배치 업무가 각 지역 교육청 산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행해짐으로 인해 어린이집 입소 희망 아동과 부모는 자부담으로 관련 병원에서 각기 진단을 받게 되어 진단기준의 적용, 관련비용 부담, 교육보육기관의 선택권 침해 등 불평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됨.
정책 제언 또는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지원센터(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장애아동복지지원법)를 포괄하는 장애영유아 선정 및 배치 기관의 설치가 필요함.

3대 의제명	장애영유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특수교사의 배치
의제 설명	<p>* 의제에 대한 개요 및 선정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영유아의 교육·보육적 욕구는 매우 다양하고 일반 교육으로는 그들의 잠재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특수교육 지원이 필요함. - 이에 특수교사의 배치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함.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특수교사 근무환경(여건)의 차이로 인해 특수교사들이 어린이집 근무를 기피하고 있음. - 따라서 현재 어린이집은 법적 특수교사 배치기준을 준수하지 못함.
정책 제언 또는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사의 자격과 근무여건을 일원화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4대 의제명	장애영유아의 교육 및 재활을 위한 로드맵 개발 및 실현
의제 설명	<p>* 의제에 대한 개요 및 선정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출현 시 전문가로부터 결정되는 장애로드맵 시스템 개발로 정확한 진단과 치료 스케줄이 계획됨으로써 부모는 안심하고 자녀의 교육과 치료를 시행하며 국가는 적절한 예산 지원을 통해 장애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장애인복지정책실현이 될 수 있음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아 출산 후 양육 및 교육 치료의 모든 것은 오로지 비전문가인 부모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고 있어 장애아동은 정확한 스케줄없이 중복적이고 일관성없는 치료와 교육 등을 제공받고 있으며 이는 장애아동의 성장에 있어 비생산적이며 재정적 부담을 가중화시킴
정책 제언 또는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영유아의 교육 및 재활을 위한 로드맵 개발과 실현을 위한 전문기관 선정 - 장애영유아의 교육 및 재활을 담당하고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 재활병원, 치료센터 등을 각 기능에 맞게 역할을 지정하며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있는 치료실 등 사교육시장 정리

5대 의제명	장애영유아 가족 지원 활성화 대책 마련
의제 설명	<p>* 의제에 대한 개요 및 선정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영유아 형제자매, 부모 등의 가족들은 장애영유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적 환경이기 때문에 가족 지원을 통해 장애영유아 환경이 개선될 수 있음.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영유아가족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한정되어 있음. - 장애영유아 양육 문제가 가족들의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정책 제언 또는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장애아가족지원관련 기관들을 포함하여 장애영유아 가족들이 용이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총 합

7. 아이행복세상백만인서명운동본부

박창현 |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



7

○ 단체명: 아이행복세상백만인서명운동본부

○ 담당자: 임미령 / 아이행복세상백만인서명운동본부 기획위원장

□ 5대 정책 의제 (정책우선순)

- 21세기를 위한 '포용적 영유아교육체제 구축'
- 영유아 대 교사 비율 개선
- 기후위기 대비 생태 친화교육과정 전환
- 장애유아 의무교육권 보장
- 질 높은 방과후 과정 운영으로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

1대 의제명	21세기를 위한 '포용적 영유아교육체제 구축'
의제 설명	* 의제에 대한 개요 및 선정 이유 - 영유아기는 평생학습의 첫 단계로 공공선의 실현을 위해 교육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 - 초저출산, 팬데믹, 기후위기, 4차산업혁명 등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대응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교육과 보육이 통합된 새로운 교육체제 구축이 요구됨.
현황 및 문제점	- 유치원은 학제에 포함되어 있으나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이므로 교육비 지원 및 교사 자격 및 처우 등 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차별이 존재함. - 관리 부처의 이원화로 인해 예산 및 행정의 중복 등 문제가 누적되어 있고 투입한 교육 재정에 따른 체계적인 질 관리가 어려움. -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이 일상화되면서 영유아들의 발달 지연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어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및 실내외 충분한 공간 확보 등 교육 여건 개선이 시급하지만 이원화된 체제 하에서는 자원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음. - 현재 어린이집에 유치원의 2배가 되는 장애유아들이 자원중임을 고려할 때 장애유아 의무교육권을 침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정책 제언 또는 과제	-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체제 일원화를 위한 - 행정 전달 체계를 교육부- 교육청으로 일원화 - 체제 구축을 위한 법령 정비 -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위한 재정 관련 법령 정비 - 총리실 산하 유보통합 추진위원회 발족 및 가동

2대 의제명	영유아 대 교사 비율 개선																																																											
의제 설명	* 의제에 대한 개요 및 선정 이유 - 영유아 대 교사 비율은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 요소이며 안전 사고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 - 코로나 19로 인해 영유아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실의 밀집도를 낮출 것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음																																																											
현황 및 문제점	- 교사 한명이 지나치게 많은 유아들을 동시에 돌볼 경우 안전 지도가 어려워 신체 조절력이 부족한 영유아들의 기관 내 안전 사고가 높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음 - 양육자와의 일대일 상호작용을 통해 돌봄과 배움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하루 10분 정도의 상호작용 조차 어려운 실정임																																																											
정책 제언 또는 과제	- 영유아 대 교사 비율 관련 규정 개정 - 교사 추가 배치에 따른 인건비와 공간 확보가 필요함 <표> 연령별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안 (단위:명) <table border="1" data-bbox="376 674 1245 923">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7">어린이집</th> <th colspan="4">유치원*</th> </tr> <tr> <th>0세</th> <th>1세</th> <th>2세</th> <th>3세</th> <th>4세</th> <th>5세</th> <th>장애아동</th> <th>3세</th> <th>4세</th> <th>5세</th> <th>장애아동</th> </tr> </thead> <tbody> <tr> <td>교 사</td> <td>1</td> <td>1</td> <td>1</td> <td>1</td> <td>1</td> <td>1</td> <td>1</td> <td>1</td> <td>1</td> <td>1</td> <td>1</td> </tr> <tr> <td>영유아(현행)</td> <td>3</td> <td>5</td> <td>7</td> <td>15</td> <td>20</td> <td>20</td> <td>3</td> <td>15-18</td> <td>20-30</td> <td>21-30</td> <td></td> </tr> <tr> <td>영유아(개선안)</td> <td>2</td> <td>3</td> <td>5</td> <td>10</td> <td>13</td> <td>13</td> <td>2</td> <td>10</td> <td>13</td> <td>13</td> <td></td> </tr> </tbody> </table> * 출처: 유치원 현행 - 육아정책연구소, 김은설외, 2016/ 지자체에 따라 비율이 다름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장애아동	3세	4세	5세	장애아동	교 사	1	1	1	1	1	1	1	1	1	1	1	영유아(현행)	3	5	7	15	20	20	3	15-18	20-30	21-30		영유아(개선안)	2	3	5	10	13	13	2	10	13	13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장애아동	3세	4세	5세	장애아동																																																	
교 사	1	1	1	1	1	1	1	1	1	1	1																																																	
영유아(현행)	3	5	7	15	20	20	3	15-18	20-30	21-30																																																		
영유아(개선안)	2	3	5	10	13	13	2	10	13	13																																																		

3대 의제명	기후위기 대비 생태 친화교육과정 전환
의제 설명	* 의제에 대한 개요 및 선정 이유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가치, 행동, 삶의 방식을 실현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의 중요성에 대한 세계적 공감과 인식이 확대됨. -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생태문명으로서의 전환을 위한 ‘삶을 통한 생태친화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수임. - 교실에서 벗어나 ‘자연·아이·놀이’ 중심의 생태 친화교육으로 전환하여 미래 세대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함 - 탄소제로 학교로의 전환을 통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적 삶을 실천하도록 함
현황 및 문제점	- 기후위기로 인한 환경 파괴, 자원의 부족, 재난의 일상화는 영유아들의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미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음 - 과도한 실내놀이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과 팬데믹의 일상화로 영유아들의 활동성이 저하되어 체력 저하 및 정서적·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정책 제언 또는 과제	- 2022개정 초·중·고등학교과정과 연계하여 생명·생태 교육과정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자연·아이·놀이’ 중심의 생태 친화교육과정으로 개정함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환경을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재구성하여 ‘탄소제로학교’로 전환하고 충분한 놀이 공간을 확보함. - 교육과정 운영의 범위를 교실에서 벗어나 지역으로 확대하여 숲유치원(숲 놀이터), 텃밭 놀이터, 모한 놀이터 등 지역 사회의 다양한 공간에서 놀이와 체험을 통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함, 놀이 지원을 위한 보조 인력 배치

4대 의제명	장애 유아 의무교육권 보장
의제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제에 대한 개요 및 선정 이유 - 장애유아 의무 교육권 보장으로 장애영유아 보육, 교육의 체계적인 통합관리를 통해 질적 개선 - 사회통합을 위한 비장애영유아와 장애영유아의 통합교육 지향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유치원 취원 장애영유아는 4351명, 어린이집 취원 장애영유아는 10,869명으로, 유치원 장애영유아와 관련해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적용되고 어린이집 장애영유아와 관련해서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과 영유아보육법이 적용되어 교사배치, 아동배치, 재정지원, 특히 장애영유아 진단, 배치 조기 치료 서비스 등의 차별을 야기하고 있음.
정책 제언 또는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유아 관련시설부터 차별없이 의무교육 시행을 위한 유보통합 우선 실시 - 장애영유아 담당교사 자격 양성 체계 정립 - 장애영유아 보육, 교육의 체계적인 통합관리를 통해 질적 개선(장애영유아 관련법 통일) - 장애영유아 교사대 아동비를 1대2로 축소 - 장애통합 영유아교육기관 확대

5대 의제명	질 높은 방과후 과정 운영으로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
의제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제에 대한 개요 및 선정 이유 - 무상교육 시행 이후 영유아 대상 사교육비가 급격히 증가함 - 부모들의 초등교육 준비에 대한 불안감과 경쟁교육이 주요인임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과후 과정(특성화) 운영을 위한 발달에 적합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방과 후 교사에 대한 전문적인 연수를 실시하고 연중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부모들의 초등 준비교육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함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기의 특별활동과 선행학습 및 과잉교육은 발달을 저해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 시킴 - 사교육비의 과도한 지출은 가정 환경에 따른 교육불평등을 야기하고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함 - 기관 내 특별활동 및 사교육의 진입은 파행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초래하여 교육의 질을 저하 시킴
정책 제언 또는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상교육비에 방과후과정비 포함으로 완전 무상교육 실현 - 영유아 연령별 발달에 따른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제공 -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육아 정책 연구소, 교육청별 유아교육진흥원 개발 보급, 교사학습 공동체를 통한 교사 연구 대회 결과물 활용) - 지역사회 친화적인 마을교육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 지역과 연계한 문화 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 및 운영(미술관, 도서관, 박물관, 음악당, 공방 등) - 지역 내 숲 놀이터 이용 정기적인 숲 체험 활동 운영

총
합

의제 종합

박창현 |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



의제 종합 |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

대한민국 미래 유아교육 보육체제 개편을 위한 연속 토론회(1-4차)의 결과(발제자, 토론자 의견, 유튜브 국민의견 포함)와 15개 참여 단체들의 교육 의제들을 종합하여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종합〉 미래 유아학교 체제 개편을 위한 10대 교육 의제

1. 유아학교 명칭 변경을 통한 미래 유아학교 공교육체제 구축
2. 유·보 체제 개편을 통한 격차 완화(유보일원화/유보통합)
3. 유아무상, 의무교육 체제 구축
4. 장애영아 무상교육 및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 체제 내실화
5. 학급당 유아수 및 교원 정원 기준 마련
6. 미래 영유아교원양성체제 개편
7. 미래 유아교사 교권 강화
8. 공사립 상생 균형 발전 마련
9. 국가교육위원회 유아교육/특수교육 기능 강화
10. 질 높은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한 여건 조성



	참여단체명	의제 내용 및 정책우선순위
1	유아교육발전을 위한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가 있는 곳 불문한 완전 무상교육 - 영유아교육 질 관리 선진화 ▶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의 부모됨 역량지원 정책 - 강력한 영유아기 부모 지원 정책 ▶ 학교&교사(영유아 교육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교육기관 스마트 안전 시스템 구축 - 영유아 교사 교권 보장 ▶ 영유아 교육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로 유보통합 - 교사 양성제도 일원화과제 제안 배경

	참여단체명	의제 내용 및 정책우선순위
2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아학교 명칭 변경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 2. 국공립단설유치원 확대 3. 유아교육 보육을 교육부로 통합 4. 미래 교육을 위한 학급당 유아 수 감축 5. 질 높은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한 여건 조성
3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아학교 명칭 변경 2. 국공립단설유치원 확대 3. 학교급식법 개정(유치원 예외 규정) 4. 시도교육청에 유아교육 전담부서 설치 5. 방과후 과정 전담 기관 설립·운영
4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아무상교육 실현 2. 사립유치원 퇴로 마련 - 용도변경 등 3. 공·사립유치원 균형 발전 4. 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자율성 보장 5. 0~2세 보육, 3~5세 교육 이원화 체계 확립
5	경기도유치원연합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출산율 저하에 따른 유아교육 재구조화 2. 사립유치원 운영의 안정성을 위한 누리과정 기본교육비의 현실화 3.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4. 사립유치원 자율성 확대 5. 국가교육위원회에 사립유치원 대표 당연직 포함
6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누리과정 지원격차 해소 2. 영아기 보육·교육의 중요성 확립 및 정책 마련 3. 보육교직원 권익증진 방안 마련 4. 어린이집 업무환경 개선 5. 어린이집·유치원 통합 추진
7	아이들이행복한세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2. 교사 업무량 축소 및 근무환경 개선 3. 실내외 놀이공간 확보 4. 유아교육과 보육의 행정관리 통합 일원화 5. 영유아 1인당 정부지원액 상향 조정 및 유형별 영유아 1인당 정부지원 차이 해소
8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2. 보육교사 임금 차별 철폐 3. 보육교사 감정노동 보호조치 (보육교사 메뉴얼 제작, 보육사업안내 반영 등) 4. 원장담임 겸직 및 초과보육 완전 폐지 (농어촌, 탄력편성 등) 5. 원마다 1인의 상용직 보육교사 배치
9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2. 5~7세 유아 의무교육 3. 학급당 유아수 감축 4. 유치원 전면 무상급식 5. 유치원 교원양성체제 개편

	참여단체명	의제 내용 및 정책우선순위
1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동의 발달권,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영유아 인권 보장 4법 개정 2. 유아 조기 영어 교육 및 교과 사교육 실태 개선 3. 유아교육기관 내 선행 유발 요인 개선 4. 양질의 보육·교육을 담보하는 국가 주도 보육 교육 체제 개편 시스템 마련 5. 교사대아동 비율 축소 / 원아 1인당 공간 비율 개선 및 바깥놀이 공간 확충
11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경기지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아교육·보육 통합 2. 학급당 학생수 상한 법제화 3. 영유아 돌봄 국가 책임제 4. 유초중등 교육 정상화와 완전 무상교육
12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영아와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조기 발견 및 중재 체계 마련 2.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의무교육권 보장 3. 유치원 내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 4. 특수교육 대상 유아 방과후과정 확보
13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의 진단·선정 및 배치 관리 시스템 구축 2. 보편적 교육과정이 실행되는 모든 유아를 위한 유아학교 3. 국가가 책임지는 내실있는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의무교육 실행 4. 장애영아 무상교육 체제 강화 5. 특수학교(유치원)교사의 법적 지위 보장 및 승진체계 마련
14	장애영유아보육교육 정상화를 위한 추진연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보 격차 해소를 위한 행정지원체계의 일원화 2. 장애영유아 선정 및 배치체계의 일원화 3. 장애영유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특수교사의 배치 4. 장애영유아의 교육 및 재활을 위한 로드맵 개발 및 실현 5. 장애영유아 가족 지원의 활성화 대책 마련
15	아이행복세상 백만인서명운동본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1세기를 위한 '포용적 영유아교육체제 구축' 2. 영유아 대 교사 비율 개선 3. 기후위기 대비 생태 친화교육과정 전환 4. 장애 유아 의무교육권 보장 5. 질 높은 방과후 과정 운영으로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

이상의 참여단체들이 제안한 의제들과 이를 종합한 미래 유아학교 10대 교육의제를 통합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¹⁾.

1. '유아학교' 명칭 변경을 통한 미래 유아학교 공교육체제 구축

여처 참여단체들이 제안한 유보격차 완화(누리과정 지원 격차, 기관, 교사자격 등), 21세기 포용적 영유아교육체제 구축, 장애영유아 의무교육체제 구축, 유아완전무상 및 의무교육 체제로의 개편 등의 제안들은 실현하기 위해 미래 유아교육과 보육 체제 개편을 위한 큰 구조적 틀이 필요

1) 박창현, 김근진, 윤지연(2021). 유아의무교육 및 무상교육·보육의 쟁점과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의 정책 제언 참고

하고,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미래 유아학교 모델이 구축이 필요하다. 국가책임의 유보통합형, 장애/영유아 완전통합형 미래 유아학교로의 전환 및 개편을 통해 교육과정, 교원양성체계, 행재정 및 전달체계 등을 새롭게 개편하고 대한민국 유아 공교육체제를 제대로 확립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미래 유아학교를 중심으로 영아학교, 초등교육과의 이음새없는 연계를 통해 보편적인 유아학교 시스템을 만들어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미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구조 구축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1) 유아학교 명칭 변경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안(2020.10. 28., 강득구 의원) 국회 통과 촉구

이를 위해 유아학교 명칭 변경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유아학교 체계 하에 유보 일원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새 정부 정부조직법 개정시 유치원과 어린이집 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0-2세 영아학교의 경우에도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신설하여 법적 체계를 마련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미 유아학교 명칭 변경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안(2020.10. 28., 강득구의원)이 발의되었으나 계류 중이다. 유아학교 체제에서 유보 일원화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유아학교 명칭 변경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유보 일원화 정책을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민들과 정치인들을 설득하여 개정안 통과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의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상 학교임에도 기간학제에서 제외되어 있어 그간 유아학교로의 기반을 확고하게 닦아오지 못해 왔다. 현재 유치원은 공교육기관임에도 그간 돌봄, 보육 등의 개념과 혼용되는 정치화 과정에 휘말려 공교육 기반을 단단히 조성해 오지 못해왔다.

본 연구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이런 이유로 선거철이 되면 매년 정치인들과 재정책자들이 유아교육을 경제 논리에 입각하여 대표적으로 만 5세를 초등 취학을 하는 학제 개편안을 제안하며 청년 일자리 문제나 입직 연령을 낮추는 공약을 제안해왔다. 이러한 경제적 논리에 기반한 접근들은 유치원이 유아교육법상 3-5세가 다니는 유아학교라는 점을 잘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민국 유아학교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기간학제 내에서 교육의 본질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절실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2) 미래 유아학교 모델 및 교육과정 구축

미래학교에 대한 담론과 개념에 대한 목소리가 교육계에 높다. 더불어 미래 유아학교 모델을 구축하고, 에듀테크, 그린스마트 교육, 전염병 및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교육, 공간의 재구조화와 혁신 등을 강화하여 교육 여건을 보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 미래 유아학교는 평생교육체제, 마을 공동체 내에서 교육구성원이 함께 만들어가고 참여하는 열린 구조의 기관 모델로 자리잡아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와 정부의 방향 설정이 중요할 것이다.

미래 유아학교의 모델 하에서 누리과정, 유아학교 교육과정으로 명칭 변경, 교육내용과 방법, 평가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유보 일원화를 통해 유아학교로 통합하게 되면 누리과정의 명칭을 유아학교 교육과정을 변경하여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대등하게 연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현재 누리과정비와 교육과정으로서의 누리과정의 이름이 혼용되며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으로서의 정체성과 그 위상이 낮은 상태이며 개념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국가수준의 유아교육과정은 영유아를 위한 학습과 발달의 표준일 뿐이지 획일화된 교육과정의 예시, 표준을 일컫는 명칭이 되어서는 단위 유아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이 살아나기 어렵다. 누리과정을 운영한다는 개념 속에서 누리과정의 충실도가 강조되는 경향이 더 높아져 단위 유아학교 교육과정의 자율화, 다양화, 지역화 기조에 배치되는 실행 양상이 나타날 것도 염려된다는 현장의 목소리들도 있다. 이에 누리과정을 국가수준의 유아학교 교육과정으로 명칭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

국가수준의 유아학교 교육과정에 미래 담론을 포함하여 추후 미래 환경에 대응하는 에듀테크 교육, 기후위기 및 전염병 대응, 통일 한반도 체계에서의 평화 통일교육강화, 생태교육, 세계 시민성 교육 등을 교육과정의 사회적 목표에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민주시민으로 성장해나가는 미래세대의 기초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놀이중심, 유아중심교육과정은 놀이를 관찰하는 것도 중요하나 그러한 관찰과 평가를 토대로 교육내용과 방법, 평가를 선택하는 교사의 역량이 보다 중요하다. 개정 누리과정 실행의 문제는 놀이관찰과 기록을 강조하나, 교사들이 이를 토대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구체안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단점이 있다. 교육내용과 방법, 평가의 질은 교사의 교육 전문성을 나타내는 것이며 교사는 이 과정을 일체화하여 교육계획을 구성하고 유아중심, 놀이중심의 교육과정을 구현해 내는 것이다. 구체화된 교육계획과 방법, 내용이 없는 교육은 가르침 없는 교육이다.

국가수준의 유아학교 교육과정은 유아, 놀이중심이나 교사의 역량에 따라 실행양상이 다양할 수 있으므로 유아학교 교사의 교육과정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사교육을 강조하고 유아학교가 교육과정 중심의 교육공동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개편해야 할 것이다.

3) 단위 유아학교 자치 강화, 교육과정 자율성/다양화 내실화

단위 유아학교의 자치를 강화하고, 단위 유아학교의 교육과정을 존중하고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 정책은 개편되어야 한다. 누리과정 안착이 아니라 국가수준의 유아학교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단위 유아학교의 교육과정이 스스로 빛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완전무상교육을 토대로 단위 유아학교 교육과정 운영이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고, 교육공동체가 함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자치 오 분권을 강화해나가도록 한다.

4) 장애/비장애 차별없는 유아학교 교육과정 구축

국가수준의 유아학교 교육과정을 만들 때 장애/비장애 차별없는 교육과정 구축을 위해 유아특수 교육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단위 유아학교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도 장애 위험군의 영유아를 충분히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장애와 비장애의 구분이 무의미한 보편적 교육과정 설계가 필요하며 이를 이해 유연하게 전문가를 포함하고 교육과정을 설계해나갈 수 있는 유아학교 교육과정 개발 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 국가수준의 미래 유아학교 교육과정의 새로운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2. 유·보 체제 개편을 통한 격차 완화(유보일원화/유보통합)

유보 체제개편을 통한 유보 일원화/유보통합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대부분 유아교육 보육을 교육부로 통합하는데 동의하나, 일부 의견의 차이는 존재하였다. 0-2세, 3-5세 연령별 일원화 체계 확립은 모두가 동의하였으나, 0-5세 교육부 체제로의 통합에 대한 이견도 존재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은 평생교육체제 하에 0-5세 단일부처로의 통합의 필요성에 동의하였고, 0-2세의 돌봄의 중요성과 단일부처 체제 하에 관계부처 합동의 지원체계 구축도 중요하게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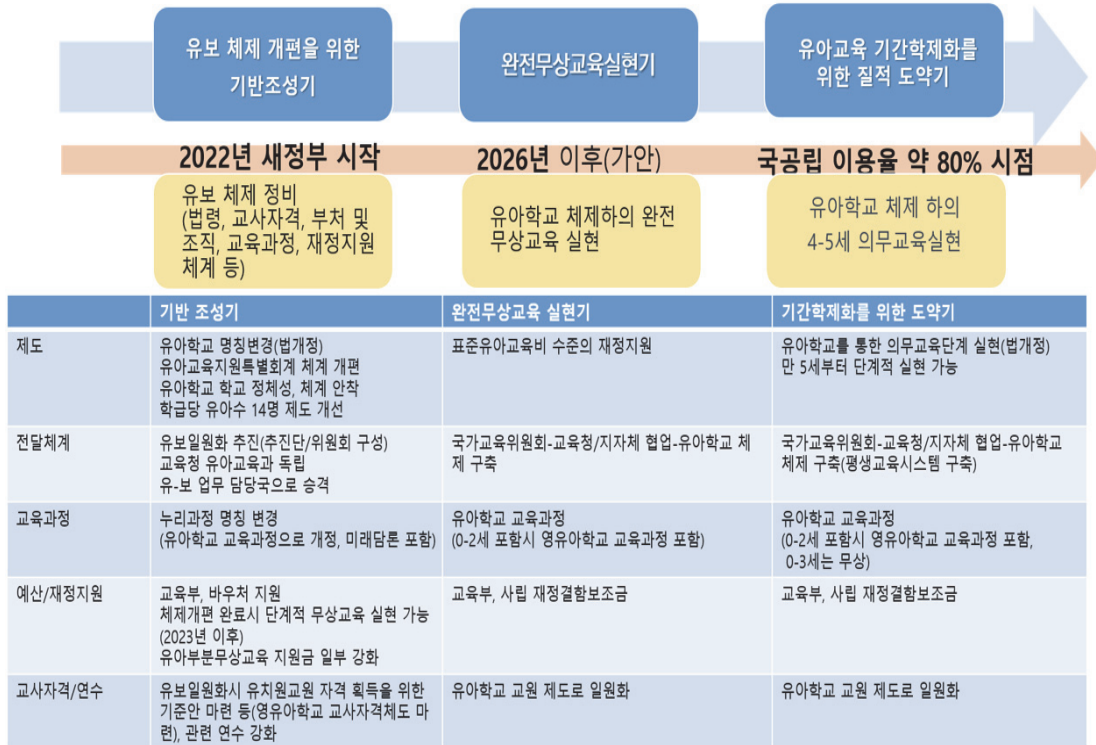
현 정부에서도 유아 단계에서부터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및 취학 직전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국정과제로 제시, 현 정부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 등을 진행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의 기반 조성하고 유치원의 학교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취학전 영유아들은 기관 선택 여부에 따라 교육과 보육의 격차가 있고,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교육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아직까지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부모의 소득수준이나 거주 지역에 따라 교육 기회의 차별성이 존재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 정책도 방향 설정은 좋았으나 성과는 아쉬운 상황이다(2020년 국공립유치원 이용율 29.8%, 교육부 공영형 유치원 사업 종료, 유치원 3법 후속조치 미비 등). 장애영유아는 의무교육대상자이나 어린이집을 선택하면 양질의 교사와 교육환경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박창현·김근진·김경희·정유나, 2021).

0세에서 취학전 유아까지 평생교육체제 하에서 이음새없는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국가가 제공하는 방향으로 영유아학교로의 체제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3-5세 유아학교(공교육제도 안착), 0-2세 영아학교 체제 구축을 통해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며, 학부모 부담과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다. 0세부터 취학전 연령의 영유아 업무를 교육부로의 일원화하여 한 아이가 태어나서 마주하게 되는 처음학교에서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국가는 일관되게 양질의 교육을 지원하고, 차별없이 돌봄을 받도록 아낌없는 노력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체제하에 마련된 통합형 미래 유아학교에서 기후위기, 디지털, 통일 한반도 평화교육, 생태교육 등을 선도하고 재원, 교사자격, 누리과정 운영,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정비 등을 체제개편을 통해 교육격차를 줄이고 교육 평등성을 실현하며 양질의 안정된 유아교육, 보육제도 안착이 필요하다. 평생교육 체제 하에서 이음새 없는 교육을 실현하고 설립유형에 상

관없는 차별없는 모든 아동을 위한 교육 체제를 실천해나갈 수 있는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 박창현, 김근진, 윤지연(2021)의 연구에서 제시된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 개편의 방향을 3단계 로드맵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미래 유아교육·보육체제 개편 3단계 단계별 로드맵



자료: 박창현, 김근진, 윤지연(2021). 유아의무교육 및 무상교육·보육의 쟁점과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p. 156.

1) [1단계] 유아교육·보육 체제 개편을 위한 기반 조성기: 2022년 새정부 시작~)

2022년 새 정부가 시작될 무렵부터 유아교육·보육 체제 개편을 위한 기반 조성기를 향후 4-5년 간 갖도록 한다. 이 시기 내에 유아학교 체제 내에서 유보 일원화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체제를 정리하고, 법령, 교사자격, 부처 및 조직 개편, 교육과정과 재정 지원체제를 정비하여 지속가능한 미래 유아학교 체제의 기반을 조성한다.

§ 교육부로의 유보 일원화를 통해 공교육의 보편성과 평등성을 확대하고, 유아학교 테두리 하에 어린 이집을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행정적 정비 필요

현재 3-5세 누리과정 지원 정책을 통해 어린이집 3-5세도 지방재정교부금을 통한 교육부의 재 정지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기반으로 임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어린이집 3-5세 유아를 지원하면서도 장학지도, 교육과정 관리, 컨

설립과 연수 등을 통해 행정적 관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어린이집 3-5세 유아에 대한 교육부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는 미약한 상태이며 재정지원을 표준유아교육비까지 늘릴 계획이 있다면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임시회계 체계를 정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교육부로 유보 일원화를 하여 재정지원의 법적 기반을 명확하게 하고, 유아학교 시스템 내에서 표준유아교육비 수준의 완전무상교육을 실현하고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여나가야 한다.

§ 유보 일원화를 통해 유아학교(3-5세), 영아학교 교사(0-2세) 자격 체제 정비 및 신설, 국무총리실 산하 ‘미래 유보체제 개편 추진위’(가칭) 마련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 개편을 위해 유보 일원화를 통해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적 격차를 줄이고, 교사양성체계를 정비하여 양질의 유아학교 교사를 길러내야 한다. 연령별 이원화 체계를 구축하고 0-2세 영아학교, 3-5세 유아학교 교사 자격체제를 정비, 신설하여 교사자격과 질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 미래세대를 위한 생태교육, 세계/민주시민교육, 지속가능한 교육, 통일 한반도 평화교육 등을 교육과정에 녹여 놀이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유아교사, 영아교사양성 체계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새 정부 시작 전, 정부조직법을 개편하여 교육부 내 복지부 보육관련국을 이관하여, 유보 일원화를 추진하고, 안정적인 유·보 체제를 정비할 수 있도록 ‘미래 유보체제개편 추진위’(가칭)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마련하여 영유아 생애초기 교육을 평생교육 체제 하에서 연계해나갈 수 있는 정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체제 종료하여 신체제로의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원확보 구상과 유보 일원화를 세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법 취지의 명분에 부합한 법 개정과 유보 일원화, 부처 및 조직개편, 교사 자격제도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고 숙의하는 과정을 거쳐 미래유아학교 체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를 구축하도록 한다.

2) [2단계] 완전 유아무상교육 실현기: 2023년부터 2026년 사이 단계적 실현

2단계 완전유아무상교육 실현기는 1단계 체제 개편을 위한 기반 조성 이후, 유아완전무상교육을 선행하고, 유아의무교육을 통한 유아학교 기간학제화의 방향으로 진행되는 시기를 의미한다. 유아학교 체제 유보 일원화 체계를 구축하고, 구축이 되는대로 완전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의무교육으로 나아가는 기초체제를 완성한다. 2023년부터 만 5세부터 완전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현하여 2026년 3-5세 완전무상교육체제를 유아학교 하에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유아무상교육정책은 2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26년에 완료 가능하다고 가정했을 때, 표준유아교육비 수준보다 원비가 높은 일부 사립 유아학교의 재정지원의 문제와 공영형 유치원 등의 법인 유치원과의 지원의 차등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완전 자율형 사립 유아학교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 또는 국민의 요구에 기반하여 시행해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후자의 경우, 완전무상교육을 시행할 때 법인유

치원과 사인유치원의 차등지원은 무상교육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므로 재정지원의 수준을 동등하게 하되 정책적으로 공영형유치원 및 법인유치원을 우대하고 혜택을 최대한 주는 정책 추진을 통해 법인화 정책을 함께 추진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립 유아학교의 법인화 정책, 또는 공영형유치원 정책도 추후 사립의 특성과 자율성을 보다 존중하고 법인을 지원하되 되도록 간섭을 줄이는 정책을 함께 시행해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 학교법인운영에서 설립자 원장은 원장을 겸직할 수 없는데, 법인 부담금 등도 없는 사립유치원의 현실을 고민한다면 법인화 정책은 이상일 뿐, 선택하지 않는 모범실패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이유로 사립유치원의 특성을 보다 충분히 이해하고 초중등과는 다른 급의 유아학교 법인정책은 따로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예컨대 유아학교의 법인 이사장 월급 제도 마련 등 기존의 초중등 사립학교와는 다른 제도마련을 통해 유아학교의 현실을 고려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3) [3단계] 유아교육 기간학제화를 위한 질적 도약기: 2026년 이후 국공립 70-80% 도달 시 유아의무교육(3-5세 기간학제화) 추진

3단계 유아학교 기간학제화(의무교육)를 위한 질적 도약기는 유아무상교육이 실현된 체제 하에서 국공립유치원 이용률 80% 도달 시 유아 의무교육 체제로 진입하는 시기를 의미한다. 미래 유아학교 체제 하에 유보통합을 완수하고, 완전무상교육, 의무교육을 실시하게 된다면 만 0세부터 국가책임교육을 실현하고 공교육체제를 구축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아학교에서는 추가적인 부모부담없이 양질의 교직원 체제 하에 미래인재를 키워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교육불평등 및 교육시스템의 획기적 개편, 저소득층 지원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의 측면에서 공익의 틀을 짜기 위한 개혁의 일환으로 유아 기간학제화는 국민들에게 매력을 끄는 정책이 될 수 있다. 현재 유아 무상교육 및 무상보육(어린이집) 제도의 실효성 저하로 인한 개선 방안으로의 대안, 유보 질적 격차의 실질적 완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무교육정책은 유의미하다. 특히 유치원은 법률상 학교입에도 학교급에서 항상 배제되어 왔는데, 유아의무교육제도화를 통한 기간학제의 확대는 하나의 학교급으로서의 유아학교로의 정체성 확립과 학교로서의 실질적 역할도 기대가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유아의무교육 체제로 가기 위해 국공립유치원 이용비율 80% 확보를 고민하고, 어린이집의 사립 유아학교로의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구성해 나가야 한다. 만 5세부터 4-5세, 3-5세 기간학제화를 단계적으로 추진 가능하며, 이에 대한 구제안과 법개정이 필요하다. 예컨대,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개정, 초중등교육법 개정하여 의무교육의 기반을 조성한다. 만 3세의 의무교육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으나, 3-5세 유아학교 체제 내에서 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하여 기간학제화를 추진하고 국가책임 유아교육을 이상적으로 실현해나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의무교육(3-5세 기간학제화) 단계가 되면,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를 개정하여 의무교육 연한을 확대하도록 제안해볼 수 있다.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년~3년의 유아교육을 추가할 수 있다. 또한 유아교

육과 초중등교육법 제12조(의무교육)를 개정하여 법체계를 통일하도록 한다. 의무교육의 연한과 세부 재원 마련에 관해서는 국민적 합의 도출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 유아학교 명칭 변경과 유보 일원화 정책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추후 연구를 진행하여 로드맵을 보다 구체적으로 그려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유아의무교육이 어려운 이유들인 유아학교의 동 수준의 균등한 설치 및 균등한 교육 환경 및 수준 보장, 의무 취원, 학부모의 선택권 등의 문제들의 해결은 추후 정책을 시행할 때 유아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해나가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유아 의무교육의 강제성 충족 여부(의무취학, 출석, 학군에 따른 유아 근거리 배치 기준)에 대해서도 초등보다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의 문제는 홈스쿨링 제도의 도입이나 양육수당의 선택 등으로 해결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유아 의무교육 추진시 공사립, 지역별 기관의 격차의 문제와 낮은 국공립 비율, 사립유치원 법인화 문제는 유아 의무교육 추진 시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이슈들이다. 또한 3세 의무교육 도입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국민의 공감을 얻어 나가야할 장기 과제일 것이다.

3. 유아무상, 의무교육 체제 구축

참여단체에서 단체의 특성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유아무상과 의무교육체제 구축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현실적으로 유아완전무상교육을 필요하나, 체제정비가 우선이다. 유아교육지원임시회계 체제 및 공공성 기제의 확보 등의 체제하에 유아완전무상교육을 실현하고, 기반이 모두 마련될 때 의무교육도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완전무상교육비 지원을 통해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취학 전 통합된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교육 기본권 보장을 강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완전무상교육은 의의가 있다. 그동안의 부분 무상교육은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체감 효과가 부족하였으나, 완전무상교육을 통한 원비 부담을 완화하여 저출생 개선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다. 또한 OECD 교육선진국의 국가책임의 무상 유아교육과 보육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의 추세는 세계적 추세와도 결맞으며 의무교육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또한 의무교육을 추진하려고 해도 완전무상이 기반이 되어야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있었다.

임시체제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종료하고, 교육부로 통합된 구조에서의 완전 무상교육 체제를 구축하여 재정지원과 행정, 거버넌스 체계를 일치시킬 필요성이 강조된다. 2013년부터 단계적 완전무상교육 실시, 2026년 완전무상교육 3-5세 체제 완성, 2026년 이후 국공립 80% 시 3-5세 유아의무교육(기간학제화) 안착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바우처 제도를 재정결함보조금(사립의 경우)으로 가능할지 고민해나갈 필요가 있다.

유아완전무상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부모부담금을 줄여야 하는데 급식비와 특성화 비용, 방과후 과정비용을 줄여야 가능하다. 특성화비용은 정책을 통해 최소화하는 정책(한 과목으로 줄이기 등) 등을 통해 줄여나가거나 방과후과정 비용에서 일부 지원하여 수익자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제

안할 수 있다. 반면, 급식비의 경우 17개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지자체와 협업하여 완전 무상 유아 급식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해결 가능하다. 친환경 유기농 무상급식 체계를 마련하여 수익자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도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고려가 필요하며 단계적 접근도 필요하다. 유아완전무상교육 확대 시기, 명분 등은 합당하나 장기예산추계시 경제성장률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전 정부에서 내국세 총액에 지방교육재정 따른 금액은 늘었으나 경제성장률 늘지 않아 비용상으로는 늘지 않았다. 경제는 좋지 않을 상황으로 예상되기도 하기 때문에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

박창현, 김근진, 윤지연(2021)의 연구에서는 3-5세 유아무상교육 재정 추계의 총합이, 연간 5조 6,065억 정도로 교육과정비 5조 606억원, 방과후과정비 5,459억원으로 추계하였다. 또한 의무교육 재정 추계의 총합은 5세 의무교육의 경우 연간 소요비용이 6조 1,308억원, 4-5세 의무교육이 6조 6,758억원, 3-5세 의무교육이 7조 2,540억원로 추계되었다.

4. 장애영아 무상교육 및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 체제 내실화

미래 유아학교 체제에서는 장애영유아가 단 한 명이 있어도 특수교육이 가능하고 교사배치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가야할 것이다. 사립유아학교에서도 특수학급을 개설하고 특수교사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영유아의 의무교육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치료와 복지, 교육이 유연하게 적용되도록 유아학교의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운영하며 지자체 등과 정보를 연계하고 유기적으로 상호작용을 하여 장애영유아가 비장애 영유아와 차별없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참여단체들이 제안한 교육의제들은 모두 우선적으로 실천되어야 할 주요 교육의제들이며, 다시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3-5세 장애유아는 의무교육대상자들이기 때문이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영아와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조기 발견 및 중재 체계 마련 2.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의무교육권 보장 3. 유치원 내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 4. 특수교육 대상 유아 방과후과정 확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의 진단·선정 및 배치 관리 시스템 구축 2. 보편적 교육과정의 실행되는 모든 유아를 위한 유아학교 3. 국가가 책임지는 내실있는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의무교육 실행 4. 장애영아 무상교육 체제 강화 5. 특수학교(유치원)교사의 법적 지위 보장 및 승진체계 마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보 격차 해소를 위한 행정지원체계의 일원화 2. 장애영유아 선정 및 배치체계의 일원화 3. 장애영유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특수교사의 배치 4. 장애영유아의 교육 및 재활을 위한 로드맵 개발 및 실행 5. 장애영유아 가족 지원의 활성화 대책 마련

5. 학급당 유아수 및 교원 정원 기준 마련

대부분의 참여단체에서 학급당 유아수 및 교사 대 아동비율의 개선에 대한 교육의제를 강력하게 제안한 바 있다. 단체별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미래 유아학교 체제를 위한 학급당 유아 수는 상한 14명으로 법률로 정하고 관련 정책들을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 공사립의 격차가 크다면 공사립을 분리해서 상한을 설정해나가거나, 수업하는 교사 수를 기반으로 교육통계를 산출하여 학급당 유아 수를 정확하게 도출하는 정책적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현재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6조(학급 수 및 학급당 유아 수) 유치원의 학급 수와 학급 당 최소 및 최대 유아 수는 유치원의 유형,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할청이 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적정 상한에 대한 정부 공통 기준을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별, 유형별 격차가 크다고 하더라도 공통된 최대 최저 표준안을 정부가 공통기준으로 설정하고 상황에 알맞게 운영되도록 정책을 시행해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이에 대한 국책연구기관의 심층연구가 필요하다. 추후 적정 상한선과 하한선을 마련하여 소규모 유치원 통폐합 또는 작은학교 정책, 분원 정책과 연계하여 유아학교 정책을 시행해나갈 필요가 있다.

6. 미래 영유아교원양성체계 개편

미래 영유아교원양성체계 개편은 현재 시점에서 중요도와 필요도가 높은 의제이다. 이미 상급학교는 국가교육회의를 중심으로 미래 영유아교원양성체계 개편을 위한 기초틀을 마련해나가고 있으나, 유아단계만 분리되어 체제개편에서 제외되고 있다. 유보 일원화 정책과 연계하여 영유아교원양성체계를 개편하여 학령인구 감소, 지역별 격차, 양질의 교사교육 강화 등의 당면과제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1) 유아학교 교사(3-5세), 영아학교 교사(0-2세) 독립된 국가 자격 기준 마련

유보 일원화 구조에서 유아학교 교사와 영아학교 교사의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교사의 자격과 수준을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 유치원 2급, 1급 체계를 유아학교 2급, 1급 체계로 명칭을 변경하고, 영아학교 자격제도를 신설하여 국가 자격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보육교사의 유아학교 교사 자격 획득을 위한 유예 기간을 설정하고, 영아·유아학교 교사의 호봉제와 수당체계를 개선하여 공사립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한다.

2) 영유아교원양성체계 개편방안 마련, 미래세대 기초교육을 위한 교원양성체계 제안

미래 유아학교 체계에서의 영아학교, 유아학교 교사 양성이 필요하므로, 미래체제에 알맞은 영유아교원양성체계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하여 미래세대 기초교육을 위한 교원양성체계를 만들고, 미래 인구구조와 교사 교육내용, 교과목 구성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심층연구를 통해 방향을 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7. 미래 유아교사 교권 강화

영유아교원양성체계 개편 등을 기반으로 미래 유아학교 교사들의 교권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교사 업무량 축소 및 근무환경 개선, 교사 임금 격차 완화 등이 제안된 주요 의제들이었다. 유아교사, 영아교사 체계로 미래 유아학교 체계가 정립된다면, 교육부 산하의 교원으로서 교사의 권익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과 함께 교사의 정치참여를 높일 수 있는 환경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8. 공사립 상생 균형 발전 마련

미래 유아학교 체제에서는 공사립 상생, 균형발전이 중요함을 특히 사립유치원 관련 단체에서 강조하였다. 공사립 상생 균형발전은 현 정부에서도 추진하고자 했던 정책과제였다. 공사립 상생 균형 발전은 교육평등성의 차원에서 필요하다. 기관유형별 격차는 영유아의 최선의 이익 추구하고 교육형평성에도 알맞지 않다. 그러나 상생발전방안은 기관과 교사자격의 격차 등의 간격을 줄이는 과제들을 해결해나가야 한다.

유아무상 의무교육 체제 하에서 사립 유아학교의 기틀을 세우기 위해서는 법인화 정책이 핵심인데, 현실적으로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정책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사립유치원 법인화 정책을 살펴보면, 서울시교육청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 제도가 추진 5년을 경과하며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으나,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 정부가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면서 추진해도 시대적 상황, 사립유치원의 여건상 추진이 어려운데, 교육부의 공영형 유치원 사업도 정부가 끝나기도 전에 종료가 되고 말았다.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정책은 긴 흐름으로 유아의무교육을 바라보면서 진행해야 하며, 공영형유치원 사업 뿐만 아니라 법인 유치원 장려책을 함께 고려하는 투트랙 정책이 필요하다. 공영형유치원 제도 보다 유연한 법인 지원책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토대 위에 사립 유아학교들도 사립학교로서 자리매김하게 해나갈 수 있으며 건강한 사학으로도 약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가 유아교육정책의 미래 비전을 명확하게 세우고 공영형 유치원 정책의 2.0 버전을 세워 나가야할 것이다.

유아완전무상교육은 사립 유아학교가 법인화를 하지 않아도 지금 수준에서도 가능하지만, 법인이 아닌 사립 유아학교의 의무교육 실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맥락에서 사립유아학교 법인화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동시에 사립유치원 퇴로 마련 정책도 함께 해나갈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사립 유아학교의 퇴로 마련을 보다 과감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 좋은 사립을 키워나가면서도 의무교육 체제에서 운영이 어려운 유아학교는 퇴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매입형 유치원 정책을 함께 추진하여 의무교육의 기반을 닦아나갈 필요가 있다.

미래 사립유아학교에도 행정, 급식 인력 지원 체계를 정확하게 구축하고 이를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K-에듀파인 지원을 위한 행정인력, 급식 지원 인력(영양사 포함 등)을 배치하여 공사립의 격차를 최소로 줄여나가야 한다.

9. 국가교육위원회 유아교육/특수교육 기능 강화

이상의 미래 유보체제개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0-5세 미래 유아학교 체제를 초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국가교육회의에서 유아교육의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유아교육이 더 이상 학교급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유아교육 분야의 전문인력을 확대하고, 육아정책연구소와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

국가교육회의는 내년에 국가교육위원회가 되면서 7월부터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수립하는 역할을 가지게 되며, 중장기 교육계획을 수립할 권한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국가교육회의의 모든 정책에는 유아학교가 학교급에서 빠져 있다. 유아교육 관련 민간 위원이 있으나, 상주하는 인력이 아니며, 현재 모든 정책들이 대부분 초중등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국가교육회의의 정책자문위원회 등에 육아정책연구소가 배제되어 있어 유아교육 정책과 현안이 국가교육회의의 교육의제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교육위원회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 자문위원회는 교육과정, 학제개편, 교사양성체제 개편 등의 중요한 이슈를 다루고 있음에도 유아교육 전문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구조이다.

국가교육회의가 내놓은 10대 교육의제에도 유아교육 의제는 단 한 개의 의제(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로 표현되어 있다. 유아교육에서 중요한 미래 이슈는 단지 유아교육 공공성에만 있지 않다. 국가수준의 유아학교 교육과정 개편, 미래 영유아학교 교원양성체제 개편, 3-5세 기간학제화 등 시급한 주제들이 초중등과 똑같은 수준으로 다루어지고 초중등과 연계되어야 한다.

유아학교를 하나의 학교급으로 존중하고, 교육체제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중장기 발전방안에서 교육부의 지원이 필요하며, 유아교육이 초중등교육체제와의 연계되어 유아의 교육력이 연계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일관된 교육체제 하에서 차별받지 않는 구조 구축이 필요하다.

국가교육위원회에 육아정책연구소 소장이 당연직으로 포함되어 유아교육 정책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조정 필요, 정책자문위원회, 민간위원 등에 유아교육전문가팀을 구성하여 국가책임의 유아교육, 미래 유아학교 기반 유아교육체제로의 초석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의 역할과 기능이 국가교육위원회로 인해 일부 조정되며 교육청으로의 권한 위임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할 때 17개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수준에서 유아교육은 유보 일원화 체제에서 기능이 강화될 것이므로 유보 업무를 담당해낼 수 있도록 국으로 승격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에 유아교육전문가를 배치하여 유아교육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육아정책연구소 내에 유아교육기능을 보다 강화하여 (가칭)미래 유아교육연구센터를 설립하고 팀을 센터 또는 국으로 승격하여 미래 유아학교 구축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 교사교육, 에듀테크 교육 등을 포괄하여 담당하는 미래유아교육연구센터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인력 및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또는 (가칭)국립유아교육원(진흥원)을 설립하여 유아학교 교육에 관한 중장기 방안과 연구, 사업을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교육청과 연계하여 유아교육 정책이 유기적으로 제안될 수 있는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10. 질 높은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한 여건 조성

참여단체들에서도 양질의 방과후과정 운영이 기본과정과 유연하게 연계되기를 원하는 의견들이 많았다. 미래 유아학교 시스템에서는 유아학교 교사들이 기본과정에 집중하여 업무부담없이 양질의 교육을 실현해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한다. 방과후과정은 공적 돌봄체계 하에 지자체 관리 체계를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 돌봄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여 유초중등 돌봄 위원회를 설립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마련하고 마을 강사를 활용하여 마을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

토론

- 토론 1 | 성기선 (더불어민주당 교육대전환위원회 부위원장)
- 토론 2 | 장명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교육정책분과 자문위원)
- 토론 3 |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회 위원장)
- 토론 4 | 고효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토론 1 | 성기선 (더불어민주당 교육대전환위원회 부위원장)

1. 10대 의제에 대한 의견

- ① 유아학교 명칭변경을 통한 미래 유아학교 공교육체제 구축
- ② 유보체제개편을 통한 격차완화(유보통합)
- ③ 유아무상, 의무교육 체제 구축
- ④ 장애영아 무상교육 및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 체제 내실화
- ⑤ 학급당 유아수 및 교원 정원 기준 마련
- ⑥ 미래 영유아교원양성체제 개편
- ⑦ 미래 유아교사 교권 강화
- ⑧ 공사립 상생 균형 발전 마련
- ⑨ 국가교육위원회 유아교육/특수교육 기능 강화
- ⑩ 질 높은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한 여건 조성

첫째,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유보통합을 실시하고, 의무교육 체제로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미국의 경우 기본 학제를 표현할 때 K-12라고 하는데, K는 유아교육을 의미합니다. 물론 주마다 제도가 달라 일괄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공립초등학교에 유아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유아교육이 공교육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단계적으로 초등 1학년에 입학하기 이전 1년 또는 장기적으로는 2년 정도를 공교육 제도에 포함시키고, 의무교육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유아교육이 공교육의 제도로 포함된다면 교육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발표 내용과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유보통합은 선언으로 한 순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모두 인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보통합위원회를 설치하여 제도적 재정적 법률적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구분되어 있는 교육과 보육의 행정 통합, 교원양성체제의 개편, 실질적인 교사 처우의 차이 해결, 법률체계 정비 등 다양한 문제들을 논의해 나가야 합니다. 차기 대통령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달성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초등 6년과 중학교 3년인 9년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1년 또는 2년의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확대 실시함으로써 교육기본권 보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장애영아 무상교육 및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 체제 내실화를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장애영아 무상교육과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의무교육체제 내실화 역시 중요한 과제입니다. 장애영아와 유아의 경우 누구보다도 조기 특수교육이 중요합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이러한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에 조기에 개입하도록 제도를 개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학급당 유아수 및 교원 정원 기준 마련, 미래 영유아교원양성체계 개편 및 교권 강화 역시 필요한 과제입니다. 초중등학교도 과밀학급 해소에 대한 요구가 강합니다. 유아교육 단계의 학급당 학생수 적정화 역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학급당 적정 유아수와 교원 정원 기준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사연구를 토대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OECD 평균 수준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학급당 유아수를 조정해야 한다. 다만, 이 과제는 한 번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점진적 개선방향으로 실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교원양성, 재정, 시설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영유아교육을 담당할 교원양성의 문제는 당장 준비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을 위해서는 교원양성 체제를 정비하여 단일 자격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기존의 아동학과, 3년제, 4년제 유아교육과, 방송통신대 유아교육과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양성과정을 통일하여 동일한 교육과정을 통해서 동일한 자격증을 갖춘 우수한 교원을 양성해야 합니다. 또한 교권이 문제 역시 중요합니다. 영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들은 매우 과도한 업무량에 힘들어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강한 요구에 교권 보호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체계 개편과 함께 교사들의 교권 강화를 위한 방안 역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공사립 상생 균형 발전 마련 필요.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에는 높은 사립의 비중이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법인화 추진과 함께 유아학교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지원체제 정비가 필요합니다. 공사립 시설, 교사, 교육과정의 균질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립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안 역시 동시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국가교육위원회 유아교육/특수교육 기능 강화, 질 높은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한 여건 조성 역시 필요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2022년 7월에 본격 설치 운영됩니다. 교육과정 개정, 국가중장기교육비전 설계, 사회적 교육갈등과제 해결을 위한 국민참여형 논의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위 위원회가 다수 설치될 것이며, 유아교육과 특수교육 관련 의제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가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유아교육/특수교육은 그만큼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교육영역입니다.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방과후 프로그램의 경우, 질적인 수준을 제고해야 하며 다양한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초등 돌봄체제 구축과 병행해서 유아교육 단계의 방과후프로그램 역시 공적 자금이 투입되어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유보통합, 특수교육 강화라는 두 가지 축으로 요약되는 이상의 과제들은 그 어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의 10가지가 관철되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의미있는 성과로 이어지기를 강력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2 | 장명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교육정책분과 자문위원)

「미래 유아학교 10대 교육 의제」에 대한 토론

1. 각 단체의 정책의제 발표 내용 요약

구분	단체 명	주요 정책 의제
1	유아교육발전을 위한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가 있는 곳 불문한 완전 무상교육 - 영유아교육 질 관리 선진화 ○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의 부모됨 역량지원 정책 - 강력한 영유아기 부모 지원 정책 ○ 학교&교사(영유아 교육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교육기관 스마트 안전 시스템 구축 - 영유아 교사 교권 보장 ○ 영유아 교육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로 유보통합 - 교사 양성제도 일원화과제 제안 배경
2-1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 연합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학교 명칭 변경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 ○ 국공립단설유치원 확대 ○ 유아교육 보육을 교육부로 통합 ○ 미래 교육을 위한 학급당 유아 수 감축 ○ 질 높은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한 여건 조성
2-2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학교 명칭 변경 ○ 국공립단설유치원 확대 ○ 학교급식법 개정(유치원 예외 규정) ○ 시도교육청에 유아교육 전담부서 설치 ○ 방과후 과정 전담 기관 설립·운영
3-1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무상교육 실현 ○ 사립유치원 퇴로 마련 - 용도변경 등 ○ 공·사립유치원 균형 발전 ○ 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자율성 보장 ○ 0~2세 보육, 3~5세 교육 이원화 체계 확립

구분	단체 명	주요 정책 의제
3-2	경기도유치원연합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산율 저하에 따른 유아교육 재구조화 사립유치원 운영의 안정성을 위한 누리과정 기본교육비의 현실화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사립유치원 자율성 확대 국가교육위원회에 사립유치원 대표 당연직 포함
4-1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누리과정 지원격차 해소 영아기 보육·교육의 중요성 확립 및 정책 마련 보육교직원 권익증진 방안 마련 어린이집 업무환경 개선 어린이집·유치원 통합 추진
4-2	아이들이행복한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교사 업무량 축소 및 근무환경 개선 실내외 놀이공간 확보 유아교육과 보육의 행정관리 통합 일원화 영유아 1인당 정부지원액 상향 조정 및 유형별 영유아 1인당 정부지원 차이 해소
4-3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보육교사 임금 차별 철폐 보육교사 감정노동 보호조치 (보육교사 메뉴얼 제작, 보육사업안내 반영 등) 원장담임 겸직 및 초과보육 완전 폐지 (농어촌, 탄력편성 등) 원마다 1인의 상용직 보육교사 배치
5-1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 노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5~7세 유아 의무교육 학급당 유아수 감축 유치원 전면 무상급식 유치원 교원양성체제 개편
5-2	사교육걱정없는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의 발달권,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영유아 인권 보장 4법 개정 유아 조기 영어 교육 및 교과 사교육 실태 개선 유아교육기관 내 선행 유발 요인 개선 양질의 보육·교육을 담보하는 국가 주도 보육 교육 체제 개편 시스템 마련 교사대아동 비율 축소 / 원아 1인당 공간 비율 개선 및 바깥놀이 공간 확충
5-3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경기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아교육·보육 통합 학급당 학생수 상한 법제화 영유아 돌봄 국가 책임제 유초중등 교육 정상화와 완전 무상교육
6-1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영아와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조기 발견 및 중재 체계 마련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의무교육권 보장 유치원 내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 특수교육 대상 유아 방과후과정 확보

구분	단체 명	주요 정책 의제
6-2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의 진단·선정 및 배치 관리 시스템 구축 ○ 보편적 교육과정의 실행되는 모든 유아를 위한 유아학교 ○ 국가가 책임지는 내실있는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의무교육 실행 ○ 장애영아 무상교육 체제 강화 ○ 특수학교(유치원)교사의 법적 지위 보장 및 승진체계 마련
6-3	장애영유아보육교육 정상화를 위한 추진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보 격차 해소를 위한 행정지원체계의 일원화 ○ 장애영유아 선정 및 배치체계의 일원화 ○ 장애영유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특수교사의 배치 ○ 장애영유아의 교육 및 재활을 위한 로드맵 개발 및 실현 ○ 장애영유아 가족 지원의 활성화 대책 마련
7	아이행복세상 백만인서명운동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세기를 위한 '포용적 영유아교육체제 구축' ○ 영유아 대 교사 비율 개선 ○ 기후위기 대비 생태 친화교육과정 전환 ○ 장애 유아 의무교육권 보장 ○ 질 높은 방과후 과정 운영으로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
종합	미래 유아학교 10대 교육의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아학교 명칭변경을 통한 미래 유아학교 공교육체제 구축 2. 유보체제개편을 통한 격차완화(유보통합) 3. 유아무상, 의무교육 체제 구축 4. 장애영아 무상교육 및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 체제 내실화 5. 학급당 유아수 및 교원 정원 기준 마련 6. 미래 영유아교원양성체계 개편 7. 미래 유아교사 교권 강화 8. 공사립 상생 균형 발전 마련 9. 국가교육위원회 유아교육/특수교육 기능 강화 10. 질 높은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한 여건 조성

II. '미래 유아학교 체제개편을 위한 10대 의제'에 대한 토론

10대 의제는 여러 관련 단체가 유아교육·보육 현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한 의제들 중에서도 미래 지향적 유아교육·보육의 체제 개편을 위해서 꼭 필요한 핵심 과제들을 선정한 것으로 어느 것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로서 동의합니다. 각 단체의 특성에 따라 다소간의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만0~5세 무상보육·교육, 공교육·보육체제 구축, 유보통합이라는 큰 틀 안에서 기관 간 발생하는 격차를 해소하여 영유아의 공정하고 평등한 출발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근본적인 제도나 체제를 개편해야 하는 중점 대형 의제를 중심으로, 의제 추진 시 보다 많은 고민과 논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몇가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1. 유아학교 공교육체제 구축에 대한 의견

사는 지역이나 기관에 관계없이 영유아들에게 균등한 양질의 보육·교육 제공, 학부모의 만족도와 교직원의 자긍심 제고, 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국가책임제를 통한 만0~5세 영유아 공보육·교육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관 명칭을 유아학교라고 변경하는 것은 매우 간단한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무늬만 학교가 아닌 진정한 학교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다른 학교급과 동일한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대로된 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만0~5세를 모두 포함하는 학교체제, 공보육·교육체제, 유보통합을 고려해야 하며, 영아일수록 안전한 돌봄과 정서적 안정을 포함한 더욱 세심하고 전문적인 보육·교육이 필요합니다. 단, 영유아기에 학교라는 용어 사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영유아학교는 영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놀이중심의 보육·교육과정이 실행될 수 있는 곳으로 재개념화해야 할 것입니다.

의무교육 의제에 대해서는 세심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유아교육·보육 의무교육은 공공성과 무상성을 확보하고 국가의 책무성이 더욱 강화되는 것이기는 하나, 여기에는 학부모의 자녀 취학 의무 부담이 뒤따릅니다.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는 것 만큼 ‘의무교육’과 ‘학교’라는 체제하에 발생하는 영유아와 학부모의 부담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기 원하는 경우, 영유아와 학부모의 다양한 양육 방식 선택권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부모가 자녀의 취학 여부를 결정하고 유예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2. 유보통합에 대한 의견

그동안 여러 정부에서 유보통합에 나섰지만 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또한 많은 논의를 거쳐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있는 정책 대안 마련과 추진이 어려운 과제임에 틀림없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영유아들에게 차별없는 교육·보육서비스 제공과 국가의 행재정 지원 관리 체계의 효율성 등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유보통합의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는 바입니다. 최근 아동수 감소와 코로나19로 사립/민간 기관의 축소와 폐원 등 운영난이 가중되면서 유보통합 필요성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유보통합’이라는 선언적·원론적 정책 제안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 당국과 이해당사자 집단, 그리고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 간의 심도있는 협력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을 추진함에 있어서 ‘선 부처통합을 통한 단계적 추진’, ‘기반 마련 후 부처통합’의 장단점이 있겠으나, 교육과정 통합(누리과정) 이후, 실질적인 추진 성과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앙 부처와 지방 전달체계를 포함하는 유아교육·보육 거버넌스의 일원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부처 통합을 한 뒤 담당 부처에서 법안, 재정 지원 방식, 시설 기준, 보육·교육비 기준을 통합하고, 가장 어려운 난제인 교사 자격 및 양성체제개편도 단계적으로 통합해 나가는 것이 책임 주체가 분명한 만큼 더 실효성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교육부로의 통합 요구가 더 강해지는 하나 이에 대한 이견이 있는지도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유보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뤄낸 국가들의 공통점은 통합 논의의 중심에 영유아를 둔다는 것과 관련 집단들간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 통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집단이 없도록 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의 기관장과 교사들에게도 의미있는 통합이 되어야 합니다. 영유아와 학부모도 중요하지만 교직원의 전문성 제고와 근무여건 개선 없이는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OECD에서는 각 국가의 통합의 배경과 취지에 따라 자국에 맞는 합리적인 유보통합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의 실정 맞고, 기존 시설의 특징점을 반영한 ‘한국형 유보통합 모델’을 구안하고 시범적용을 통해 확산·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유보통합을 한다고 해서 모든 기관을 하나의 틀에 넣어서 규격화·획일화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특징과 장점을 충분히 반영하여 운영의 다양화를 보장해야 합니다.

3. 무상교육에 대한 의견

2012년~2013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5세 유아를 대상으로 누리과정이 시행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공통 교육과정으로 교육하고, 국가가 유아학비와 보육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지원비는 7년만에 2만원씩 두차례 증액되어 올해 26만원으로 인상되었으나 당초 계획인 30만원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이러한 정부 지원금 외에 학부모 부담액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국공립과 사립/민간 기관 간의 편차가 커서 학부모의 부담 격차가 있습니다.

무상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현실적이고 타당한 표준유아교육·보육비의 책정·적용입니다. 표준유아교육·보육비에 준하는 금액으로 지원하지 못하면 결국 학부모의 부담이 발생하여 학부모의 정책 체감도가 낮을 수 밖에 없고, 기관의 안정성있는 운영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도 어렵습니다. 표준유아교육·보육비 수준에 맞게 비용을 지원하여 교육·보육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유아의 급식 및 간식비도 전액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공사립 상생 균형 발전

영유아 국공립 기관 이용율이 국공립유치원 29%, 어린이집 20% 수준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그만큼 사립/민간 기관의 영유아 분담 비율이 높아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한, 최근 아동 수 감소와 맞물려서 국공립 확충은 미이용아의 유입이 아닌, 사립/민간 영유아의 유출(이동) 유발 및 사립/민간 폐원 증가로 연결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공립 기관의 지역적 불균형, 이용 비율이 낮은 점, 학부모의 국공립 선호도를 감안하여 일정한 수준까지의 확충은 필요합니다. 단, 국공립 확충 적정 수준에 대한 국가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며, 정원 미충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필요한 곳을 찾아 적재 적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내 일정한 영유아 수를 고려할 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수급 및 설치 계획이 통합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 또한 관리 부처가 이원화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는 어려운 문제이며, 결국 유보통합이 되어야 실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공교육체제 확립은 사립/민간 기관의 동참 없이는 성취가 어려운 과제입니다. 어느 지역에 살 건, 어떤 기관에 다니건 우리 영유아들에게 균등한 양질의 보육·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을 담보한 사립/민간 기관에 대해서는 국공립에 준하는 재정 지원으로 국공립과 사립/민간 간의 공생적 균형 발전을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5. 특수교육에 대한 의견

10대 의제 중 '장애영아 무상교육 및 특수교육 대상 유아 의무교육 체제 내실화'의제는 중요도로 볼 때 제일 처음 순서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본 의제는 다른 어떤 의제보다도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로서 모든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의 조기 진단·선정, 배치, 최적의 교육을 포함하여 장애영아의 무상교육 및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의무교육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들도 차별없이 공정하고 평등한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는 무한 책임을 가지고 지원해야 합니다.

Ⅲ. 추가 의제 제안

추가로 제안하고자 하는 의제는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의 연계 강화입니다. OECD의 최근 보고서에서는 유아기는 교육의 효과가 가장 큰 시기이고, 이 효과는 2~3년 후 약화될 수 있어서 초등학교와의 적절한 연계가 되지 않을 경우, 초등 저학년 기간 동안 그 효과가 줄어들거나 없어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즉, 유아의 초등학교로의 유연한 전이는 학교에서의 순조로운 출발을 가능케 하고, 이후 학습에도 장기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유아교육기관과 초등학교 간의 연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5월에 발간된 육아정책연구소의 ‘놀이중심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유아의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개정 누리과정 시행 이후 부모들은 자녀들이 더 즐겁고 행복해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더 가고 싶어 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스스로 하려고 한다는 점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습니다. 반면에 ‘놀이만 하다가 초등학교에 잘 적응할지 걱정된다’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발달에 적합한 놀이와 교육환경이 초등학교에 가면서 계속 이어지지 않고, 교과 중심의 학습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어-유-초 연계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OECD는 유-초 연계 개념과 관련하여 그간 ‘유아를 학교에 준비시키는 것(readiness for school)’ 또는 초등교육을 유아교육기관에 그대로 도입하는 ‘학교화(schoolification)’의 의미로 잘 못 사용한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적은 우리가 ‘학교’라는 용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게 된 것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유아교육기관에서만 유아에게 학교를 준비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유아를 맞을 준비(a school readiness for child)를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유아를 보내고 맞이하는 두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IV. 맺는 말

이상에서 논의한 의제 외에 ‘학급당 유아수 및 교원 정원 기준’과 ‘질 높은 방과후과정 운영 여건 조성’은 유아학교 체제 구축 의제의 세부안으로, ‘미래 영유아교원 양성체제 개편’과 ‘미래 유아 교사 교권 강화’는 유보통합 의제의 세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유아교육/특수교육 기능 강화’도 중요하나 유아학교 체제개편 10대 의제 속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타 과제들과 수준 측면에서 적절한지 재고가 필요합니다. 10대 의제는 제목이 매우 포괄적인 대형 의제와 그에 따른 세부 의제간 항과 목의 분류와 포함관계, 방향성만 선언적으로 명시한 의제들을 검토하여 일부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육아정책연구소의 박상희 소장님과 연구팀,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토론 3 |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

「미래 유아학교 10대 교육 의제」에 대한 토론

우리나라의 미래 유아교육 및 보육 체제 개편을 위해 지난 수개월 동안 4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진행하고, 그 결과가 10대 의제로 제시되었습니다. 상당히 의미있는 과정이자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의제들은 영유아교육 및 보육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미래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며 우리 자녀들이 보다 행복하게 성장하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를 비롯하여 노력해주신 많은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핵심 공약으로, 주요 입장으로 삼아 힘을 보태겠습니다.

10대 의제는 유아학교 명칭변경을 통한 미래 유아학교 공교육체제 구축, 유보체제 개편을 통한 격차 완화, 유아무상 및 의무교육 체제 구축을 앞 순위에 배치했습니다. 유보통합을 하고,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바꾸며, 무상의무교육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과 같은 이원화되어 있으면서 기간학제에 포함되지 않은 체제로는 곤란하다는 함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유아 단계의 학제 개편 의미도 있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정의당은 4년 전 2017년 대선과 작년 2020년 총선에서 유보통합 및 유아학교 등을 주요 공약으로 했습니다. 말씀하신 10대 의제와 비슷한 문제의식이었습니다. 이번 대선 공약은 아직 발표되지 않아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 있지만, 4년 전부터 이야기해온 정책공약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2017년 대선 “유보통합으로 유아 3년 공교육화”

- 유아 3년 공교육화로 기본 학제에 포함, 교육부로 유보통합, 보건복지부 관련 조직의 이관으로 교육부는 2차관, 교육청은 복수 부교육감,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교사 자격과 보수체계 정비.
-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을 교육부 및 교육청으로 이양 또는 국고 지원
-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늘리고 유치원·어린이집 지원 방식을 개선하여 양질의 유아 공교육 제공
- 국공립유치원 확충, 단설 180개원 등 단설과 병설유치원 늘려 원아수 기준 40%,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2018~2022년) 수립하여 시행

2020년 총선 “만 3~5세 유아 3년 책임교육을 하겠습니다”

- 만 3~5세 유아 의무교육(의무교육은 무상)
 -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통합하여 유아학교 설립
 - 국가는 교육시킬 의무, 학부모는 취학의무 유예(학부모가 취학 여부 결정)
 - 10년 장기 프로젝트 추진
 - (1단계) 유보통합 추진. 교사 자격 및 보수체계, 부처 일원화
 - (2단계) 유아학교 제도 마련.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장점 흡수
 - (3단계) 시범운영하면서 단계적 확대
- 국공립유치원 50%
 - 2021년까지 정부 목표대로 40% → 2023년까지 1천 학급 추가로 50%
 - 신증설과 매입형 등 다양한 방안으로 추진하고, 단설과 병설 균형있게 안배
- 누리과정 지원단가 월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학부모 부담 경감
-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하여 임금격차 해소

이번 대선에서는 여당의 대선후보도 유보통합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누리과정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통합관리가 어렵다”며, “우리 아이들이 어느 시설에 다니든지 격차가 발생하지 않고, 질 좋은 보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방안으로 ▲유보통합위원회 구성하여 단계적 실행방안 수립, ▲부처통합 논의 진행 및 교사의 자격 및 양성체제와 처우 개선, ▲안정적인 자원 확보 방안과 법안 마련을 제시했습니다.

의미있는 일입니다. 거대야당도 비슷한 입장일 것으로 판단합니다. 유보통합은 사실 진보와 보수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웬만한 정당이라면 추진할 의사가 있을 겁니다. 문제는 추진 여부가 아니라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관련하여 지금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우선 교육재정이 인위적으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감소분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보전해야 하는데, 이번에 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 2018년, 2019년 등 지금까지는 사안 있을 때마다 했는데, 이번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규모가 4천 359억원입니다. 교부율로 보면 0.15%입니다. 매년 그 만큼의 손실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재부 입김이 작용한 영향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위적인 교육재정 축소로, 한 차례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까지 이루어지면 6천 793원 손실입니다.

여기에 얼마전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에 공동사업비 제도가 도입됩니다. 유치중고등학교에 쓰이는 교부금이 평생교육이나 고등교육 등에 투입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무상급식 방식이 아니라 분담비율 먼저 정하는 방식이라면, 교부금의 축소는 불가피합니다. 교부금 제도 자체에 대한 검토도 하기로 했습니다. 재정당국이 원하던 방식이 관철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2022년 12월 31일이면 누리과정 재정분담이 일몰됩니다. 유치원은 교부금이 부담하고, 어린이집은 국고가 부담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행여 내년 예산 기준으로 어린이집분 1조 9천 870억원이 교부금을 잠식하는 형태로 귀결된다면, 유보통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유아 무상교육이나 의무교육에 추가 재원이 필요할텐데, 명함도 내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공립유치원 확충입니다. 정부는 올해까지 2천 600학급 이상 확충하여 취원율 40%를 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학급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취원율은 미지수입니다. 지난해 2020년 목표가 34%였는데, 취원율은 29.8%에 머물렀습니다. 2019년과 2020년 두 해 연속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학급은 달성했는데, 취원율은 달성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국공립유치원에 취원하는 학생들이 적었거나 그게 아니라면 새로 확충한 학급들이 접근성 떨어져서 그럴 수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올해 2021년까지 취원율 40%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반기 교육통계가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국공립 확충은 유아학교 전환, 기간학제화, 무상의무교육 등과 연관 있습니다.

2018~20년 국공립유치원 확충 실적

		2018년	2019년	2020년
학급	목표	497학급	1,080학급	600학급
	실적	501학급	966학급	885학급
취원율	목표	-	29%	34%
	현황	25.5%	28.5%	29.8%

* 교육부 자료 재구성

** 취원율 : 매입형, 공영형, 부모협동형 포함

세 번째는 사립유치원 법인화입니다. 정부는 기존 유치원에 대해서는 공영형 유치원으로, 신규 설립 유치원에 대해서는 법령 정비로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공영형 유치원은 중앙정부의 경우 사업 중단입니다. 서울교육청은 지속한다는 입장이나, 전국 사업은 없어질 예정입니다. 사립유치원은 선 지원 후 정비의 방식이 요구되는데 있는 사업마저 중단합니다. 신규 설립 유치원에 대해 학교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만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은 현재 없습니다. 중앙정부는 정부입법을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입법은 추진 소식이 궁극적입니다. 정의당 법안은 공동발의 10명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법인화가 더딘 상태에서 유보통합, 유아학교 전환, 기간학제화, 무상의무교육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10대 의제는 중장기 과제입니다. 단기간에 가능한 것도 있겠지만, 대체로 오랜 시간과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 만큼 꾸준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정권을 뛰어넘는 교육의제로 접근하는 것도 요구됩니다. 정치적으로 진보냐 보수냐 하는 접근은 경계해야 합니다. 교육적으로 타당하고 의미있는 만큼, 보다 많은 이들이 마음과 힘을 합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족 하나 덧붙이자면, 학급당 유아수의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 근거가 있었으면 합니다. 초중등교육의 20명은 교실 크기와 거리두기의 학교방역 차원,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수치와 비교되는 교육적 차원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급당 유아수도 왜? 라는 질문에 답할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 4 | 고효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미래 유아학교 10대 교육의제」 발표에 대하여

현재 우리나라 유아교육은 만 3~5세 누리과정을 시행하였으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된 기관 운영, 다양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하는 교육의 편차, 아직 낮은 국공립유아교육 기관의 수용률과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학부모의 추가부담액 등으로 인해 유아기부터 교육 불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유아 의무교육 도입에 대한 논의는 유아교육 공공성 제고와 함께 지속적으로 있었으나, 여전히 제자리걸음이었습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가정과 지역사회의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유아가 질 높은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유아 의무교육 시행방안'을 연구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만4~5세 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제안하였습니다.(2021. 11. 24.)

금번 육아연의 5차에 걸친 집중적인 토론과 그 결과로 제안하신 미래유아학교 10대 교육의제에 대하여 환영하며 여러 단체의 제안과 더불어 실현 가능한 방법을 서울시교육청에서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유아학교 명칭변경을 통한 미래 유아학교 공교육체제 구축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과 이를 통해 학교로서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하여 1995년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나 유치원은 일본식 이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개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49번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가 의미하는 것처럼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하고 교육기관으로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의무교육 시행 방안을 제안하면서 현재 의원발의 후 국회 계류 중인 '유치원'에서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조속 처리를 촉구하였습니다.

본질적으로 '유치원'은 교육기본법 제9조* 및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운영되어,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학교입니다. 또한, '유치원' 명칭은 유아교육기관 창시자인 프리벨의 'Kindergarten' 용어를 일제 강점기에 일본식으로 번역되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으므로 개명이 필요합니다.

유아교육을 유·초·중·고의 학교 체제로 포함하기 위해서는 그 명칭부터 '유아학교'로 바로잡고 학교로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 * 교육기본법 제9조: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 * * 유아교육법 제2조: 유치원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동법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2. 유보체제개편을 통한 격차완화(유보통합)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와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등에서는 유보통합을, (사)한국사립유치원 협의회에서는 0~2세 보육, 3~5세는 교육으로 이원화 체제 개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유보통합은 30여년 전부터 필요성을 이야기하며 통합을 시도하였으나 접점을 찾지 못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안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만 0~3세 보육은 어린이집으로, 만 4~5세 교육은 유아학교로 단일화하여 해당 연령에 따른 대상 기관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만 3~5세 누리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재정지원을 통해 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면, 이제는 △만 0~3세는 보건복지부-지자체-어린이집으로 이어지는 보육체계, △만 4~5세는 교육부-교육청-유치원으로 이어지는 교육체계로 나누어 보육과 교육정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만 3세 교육은 기존 누리과정의 교육과정을 따르도록 하고, 만 3세 누리과정에 참여하는 학부모에게도 기존처럼 학비를 지원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이는 교육과 보육의 다양한 입장 차이를 수용하면서 교육 수요자인 유아와 학부모 입장에서 보다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접근을 염두에 두고 제안한 안임을 밝힙니다.

3. 유아무상, 의무교육 체제 구축

의무교육의 전제조건이 되는 무상교육을 위하여 유아학비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합니다. 의무교육에 필요한 재정은 국가 부담이 원칙으로 현재 누리과정 유아학비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따라 지원되나, 2022. 12. 31.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추후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중앙정부 수준의 근거 제시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유아에게 학비를 추가 지원하는 「교육 취약계층 학비 지원 확대 사업」을 2021년 10월부터 시행하며 유아교육의 무상교육 첫걸음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의무교육 체제 구축을 위하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의무교육의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유아 교육기관 확보를 위하여 일정 수준을 갖춘 유아 교육기관을 ‘유아학교’로 일원화하는 것을 제안하였고 국공립유치원 및 공공성을 갖춘 사립유치원, 일정 기준 이상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유아학교’로의 전환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장애영아 무상교육 및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 체제 내실화

장애영아 무상교육 및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 체제 내실화에 관한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를 위한 추진연대 세개 단체의 의견에 동의하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2021년 10월부터 학비를 추가 지원하며 유아특수교육의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가 소외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며 책임교육의 밑바탕을 마련하고자 2022. 3. 1자로 특수교육과를 신설하여 특수교육에 대한 다각도의 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5. 학급당 유아수 및 교원 정원 기준 마련

유아와 교원의 안전 확보, 효율적인 교육과정운영 및 학급 운영을 위한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유아배치지표(학급당 유아수) 하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지역별·설립 주체별로 학급 당 유아 수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학급 당 유아 수의 기준을 설정하고 학급당 유아 수 감축에 대한 단기·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운영하여 유아 배치지표(학급당 유아수) 감축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6. 미래 영유아교원양성체계 개편

의무교육 수준의 균등성 확보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가진 교원 확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유아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유치원 교원 양성체제 연한을 4년으로 통일하여야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유아 의무교육 시행 방안’에서 현재 3년 및 4년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 교사 양성 교육 연한을 4년으로 상향 조정하고, 자격증 취득 요건과 과정의 표준화를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의무교육 실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교사 선발을 위한 임용제도에 대한 정비 및 현직교사의 자격증 갱신 단계에 필요한 경력, 전문성, 지식, 실행 능력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다양한 학력과 경력을 가진 현직교사들에게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의무

교육에 필요한 지식과 교수학습 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7. 미래 유아교사 교권 강화

학교(유치원)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교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합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치 가능합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권보호 및 교원치유지원센터(공·감) 및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 유아교사의 교권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8. 공·사립 상생 균형 발전 마련

아이들 모두가 질 좋은 유아교육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공·사립의 균형잡힌 발전이 필요합니다.

교육부 차원에서는 에듀파인 현장 안착지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연장 및 유아학비 부담 완화,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 개선, 유치원 종합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등 방안 마련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사립 상생 균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유아교육 혁신을 위한 행정시스템 구축으로는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의 안정적 사용을 위한 상시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의 사립유치원 안정적 정착을 위해 소규모 컨설팅과 홍보 지원을 하며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공·사립유치원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지원을 확대(전년 대비 1인당 3만원 인상) 추진하였습니다.

셋째, 통학이 불편한 공립유치원의 통학여건을 개선하여 안전한 유아 통학환경 제공을 위해 공립유치원 어린이통학버스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유아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사립유치원 어린이통학버스 위치알리미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넷째, 학부모와 함께하는 공감·소통으로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 문화 조성을 위하여 유아와 부모가 행복한 온·오프라인 놀이 워크숍 ‘부모 행복교실’ 운영 및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가는 학부모회 운영을 통하여 부모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 수요와 특성에 맞는 공·사립유치원간 교육과정 중심 네트워크 11개팀 운영으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놀이지원 역량강화를 위해 네트워크별 교원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 국가교육위원회 유아교육/특수교육 기능 강화

국가교육위원회가 유아교육 및 보육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 위촉을 확대하여, 유아교육 정책을 만드는 통로 역할을 하고, 유아교육의 기능을 강화 할 수 있기를 제안합니다.

10. 질 높은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한 여건 조성

방과후 과정 운영 비율은 시·도별 차이가 있겠으나 서울의 경우, 65% 이상이 이용하고 있어 질 높은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행·재정적 지원은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이행복세상백만인서명운동본부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유아발달 및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질 높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방과후 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되고 방과후 과정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에는 수요자와 유치원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맞춤형 돌봄서비스(07:00~22:00 이내에서 유치원 여건에 따라 조정)를 운영하고 있어 학부모 만족도가 높습니다.

또한 2019개정 누리과정을 포함한 지원정책 및 유아교육의 국제동향, 다양한 양육방식 등을 고려한 홍보 동영상 10편을 제작·배포하여 학부모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유아 의무교육 시행이 어렵다고 더 이상 미루기에는 교육불평등과 저출생으로 대표되는 우리 사회의 위기가 아이들의 미래까지 너무 가까이 다가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주인공이 될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체제의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고, 오늘 이 토론회가 바로 그 시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KICCE 정책 토론회(8차)

대한민국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개편을 위한 연속 토론회

5차 토론회

미래 유아학교 10대 교육 의제